第301回國會
(臨時會)

國會本會議會議錄

第3號

國 會 事 務 處

2011年6月3日(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附議된案件

o 교섭단체(민주당) 대표발언 ····· 1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 4

(10시01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국장 한공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교섭단체(민주당) 대표발언

○의장 박희태 오늘은 대정부질문을 하는 날입니다마는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교섭단체 대표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원내대표 김진표 의원입니다.

어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께서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나라를 뒤덮은 서민과 중산층의 한숨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한평생 한 푼 한 푼 모아 저축한 돈을 하루아침에 날려 버린 부산의 어머니, 4대강 공사 낙동강 현장에서 생때같은 남편을 잃은 전라남도의 젊은 새댁, 대기업 계열사의 문어발식 확장에 밀려 수십 년 이어온 가게를 접고 실업자로 전락한 경기도의 빵집 사장님, 슈퍼마켓 사장님들,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하라며 광화문에 드러누워 울부짖던 전국의 대학생들, 서민과 중산층의 하소연이 들리십니까?

물가는 벌써 5개월째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최악입니다. 전셋값은 110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이 때문에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사상 최초로 800조 원을 돌파했고, 서민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상 실업자'는 425만 명에 달하고, 대학을 졸업한 청년의 절반은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서민 경제, 중산층 경제는 지금 파탄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고환율 정책, 잘못된 출구전략 때문입니다. 출구전략은 이미 지난해에 시작했어야 했고 그 핵심은 물가 안정에 있습니다. 고환율 정책의 혜택은 대기업과 특권층만이 누리고 그 후유증인 고물가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대책 없이 금리를 인상하면 서민은 죽습니다. 금리 상승에 취약한 서민들에게 먼저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그렇게도 일자리 추경, 일자리 예산을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와 정반대로 갔습니다. 출구전략은 대기업에 먼저 적용해야 하는데 거꾸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정 투입 일자리 창출 규모를 2009년에는 80만 개였는데 작년에는 58만 개로, 금년에는 56만 개로 축소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중소기업 지원 예산도 깎아 버렸습니다. 어이없게도 거꾸로 된 출구전략을 시행한 것입니다.

최고의 서민 대책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대학생 반값등록금,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 일자리 및 비정규직 지원, 구제역 대책 등 모두 6조 원을 투입하는 민생 추경예산편성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루라도 빨리 민생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국민의 원성을 들으십시오. "내가 해 봐서 아는데……" 이런 말만 하지 마시고 진심으로 가슴을 열고 진정으로 귀를 열어서 국민의 애타는 한숨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4년째인 지금 민생은 무너지고 국민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급기야 저축은행 사태라는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까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반값등록금 공약은 물론 국책사업을 둘러싼 대통령의 잇따른 공약 파기로 국론 분열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여전히 남 탓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이제 대통령의 '남 탓 타령'에 넌더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디 남 탓만 하지 마시고 '잘된 일은 네 덕이고 잘못된 일은 내 탓이다'라고 하는 금언을 새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성하고 쇄신하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라!' 이것이 지난 4·2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 모두에게 내리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뜻을 따르면 살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 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어야 합니다. 국민에게만 희생과 고통 분담을 강요해서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난국을 타개해 나갈 정책과 대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를 민생진보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정책 대안을 만드는 것, 복지가 성장의 한 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민생진보 국회입니다.

민생진보 국회는 사람과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반값등록금과 전·월세 상한제를 실현해서 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번 6월 민생진보 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값등록금,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상아탑으로 상징되던 대학이 과거에는 우골탑으로, 현재는 '인골탑'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소 팔아 대학 보내던 시절이 가고 이제는 사람 목숨까지 담보로 잡아야 할 만큼 등록금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비쌉니다. 그러나 미국은 장학금이라도 많지 않습니까?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젊은이가 2006년에는 670명에서 작년에는 2만 5000명으로 무려 38배가 늘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한 달에 70시간씩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 학기 등록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학비를 벌려고 자신의 피를 뽑는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고 합니다.

등록금 문제, 이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민생 현안입니다. 6월 국회에서 반값등록금을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당장 이번 학기에 없어지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복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이자율을 3%로 낮추기 위한 5000억 등록금 추경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동시에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 등록금 관련 5대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를 '5+5 등록금 대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등록금 5+5 대책,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합시다.

MB 정부의 권력형 비리 게이트,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MB 정부의 저축은행 사태는 특권과 반칙으로 서민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권력형 측근 비리 게이트입니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이미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위원 외에 정진석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 청와대와 정권 실세들의 이름이 해외 도피 중이거나 구속된 로비스트들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을 받으며 연일 언론에 줄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의 문제점은 대주주들이 불법 대

출에 직접 관여해서 부실을 초래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들이 떠안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저축은행 부실을 2008년 11월 저축은행 PF 대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도 그동안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기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주요 일간지 1면 톱에 보도된 물방울다이아,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있습니까? 돈을 받은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의혹의 인물들과 골프 치고 고급 식당에서 밥 먹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명박 정권의 실세들이 죄다 이렇게 해 놓고 적반하장으로 민주당 의원에게 '말조심해라' '책임을 묻겠다', 어떻게 이런 으름장을 놓을 수 있습니까? 이명박 정권, 참 나쁜 정권입니다.

깃털은 무성한데 아직까지 몸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눈은 이미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이를 막아 보려고 야당을 상대로 저질 정치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일부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이 아니라 '천검'도 해야겠지만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꼼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감독 부실 문제, MB 정부의 퇴출 저지 로비 등 각종 비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피해자 대책,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한·EU FTA 후속대책,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한·EU FTA 발효로 큰 피해를 입을 농축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농어민지원특별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대비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FTA는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4년여에 걸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어렵게 겨우겨우 이익의 균형을 맞추어 놓았었는데 이명박 정권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와중에 졸속 재협상을 벌여서 어렵게 맞춰 놓은 이익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깨어진 균형을 다시 바로잡는 리밸런싱(Rebalancing)입니다. 재재협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지금 비준안을 국회로 넘긴다면 국회는 내용 수정을 하지 못하고 찬반표결밖에 할 수 없습니다. 비준안 상정 이전에 심도 깊은 논의를 끝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FTA 재재협상을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즉시 논의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회 상정을 미루고 FTA로 피해를 보는 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FTA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검찰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고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등 사법 개혁의 성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강자에게는 정의를, 약자에게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간절한 여망입니다.

이명박 정권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에 실패한 정권임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대북강경책을 구사해 온 이명박 정부가 뒤로는 정상회담을 애걸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정상회담은 물론 그 어떤 형태의 대화 노력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정정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진정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면 적대적 대북강경책부터 버리고 대북 쌀 지원 등 인도적 지원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남북문제를 푸는 첫걸음입니다.

여야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재개해서 북한주민의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인 북한민생인권법을 상정해 토론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의안처리개선법 처리로 상생의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회는 지금과 같이 극한 대립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회는 폭력국회, 대결국회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18대 국

회 들어 일상화된 날치기, 일방적 단독 처리가 국회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야가 이번 6월 국회에서 의안처리 개선법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법안 발효 시점이 비록 19대 국회이기는 하지만 1년 남은 18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의 정신을 살려 한미 FTA 비준안이나 예산안 날치기, 일방적 직권상정은 이제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권은 실패한 정권입니다. 민생 파탄, 민주주의 후퇴, 평화의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이 떠안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의 한숨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반값등록금 실현, 전·월세값 안정, 일자리 창출, 무너진 민생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우리 국민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오락가락하는 부자감세 철회, 반값등록금 주장을 믿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보여 주십시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민생 살리기 여·야·정 협의체를 즉각 구성합시다.

머리를 맞댑시다. 지혜를 모읍시다.

민주당이 앞장서서 국민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

1.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0시18분)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 제1항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세 분입니다.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을 실시하고 정회한 다음 오후에 속개하여 아홉 분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비례대표 송민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송민순 의원입니다.

총리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연일 국회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괜찮습니다.

○송민순 의원 사실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내각에서 갖는 그런 권한보다는 국회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는 그 책임이 너무 커서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국정을 위해서 열심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공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송민순 의원 오늘 아침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의결하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송민순 의원 총리님, 평소에 많은 균형을 찾는 법조에서 오래 일을 하셨는데 지금 FTA에 관련된 전체 모양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 김진표 원내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2007년도에 만들어진 협상안, 협상 그게 이익 균형이 잘 맞춰져 있었는데 재협상으로 인해서 그 이익 균형이 깨졌다, 그렇기 때문에 재재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과연 이익 균형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 상임위나 심의과정에서 잘 검증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민순 의원 이익 균형이 깨진 내용도 중요하고 또 이런 전체적인, 절차적인 모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2008년 말에 국회 외통위에서 강행통과를 했습니다, 미국은 준비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랬다가 미국이 내용 바꾸자고 하니까 또 그것을 바꾸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 안을, 물론 번역 문제도 있지만 또 다시 철회를 해서,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국무회의에서 국회 상정을 전제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런 모양이 정말 우리가 G20 국가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에서 국제 사회에 내놓으면 참 정말 볼썽사나운 이런 모양입니다.

제가 내용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모양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내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전 세계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임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야말로 볼썽사나운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소박하게 갖는 의문 하나는 전 정부에서 좋은 FTA를 체결했는데 그 뒤에 FTA에 부정적인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고, 특히 자동차 관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참여정부에서 만들어진 FTA안이 되도록이면 빨리 우리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되면 말하자면 미국식의 그런 압박을, 재협상이라든지 FTA에 부정적인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와 같이 무리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 절차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참여정부에서 했던 그 안을 참여정부를 사실상 승계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김진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 균형이 잘 만들어진 안이라고 한다면 왜 그때 그렇게 반대를 하셨는지 하는 것이 제 소박한 의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협상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익의 균형이 깨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 과정이라든지 논의돼 가지고 정말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송민순 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이익 균형을 충분히 협의하고 이렇게 하려면 미국처럼 말씀이지요 행정부가 의회로 보내기 전에 사전에 여야, 그리고 행정부가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알기로는 금년 7월, 8월 안에 미국에서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을 봐가면서 우리도 그것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적어도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 상정은 해서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순 의원 총리님, 우리가 개인이나 국가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매번 다른 실수를 하고, 바보 같은 사람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고 그랬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으면 지금 미국에서 무역구조조정지원에 관련된 미국 행정부, 즉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분위기에 쏠려서 하지 마시고 미국에서 TAA와 관련된 미국 내의 국내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상황을 충분히 보고 그 사이에 우리는 국내적으로 여야 간에, 그리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견을 좁혀서 그다음에 이것을 상정을 해서 국회의 절차를 거쳐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보고받고 파악한 바, 그리고 이번에 OECD에 참가해서 우연히 만난 미국 측 관련 인사들의 의견이나 발언에 의하면 미국에서도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금년 7월, 8월에 반드시 체결하겠다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사정을 물어봐서 기본적으로 한국은 만들어진 안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적 합의, 공감을 얻어서 처리할 입장이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송민순 의원 총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미국의 상황을 가장 보수적으로 봐서 지금 미국이 8월 둘째 주에 의회가 휴회에 들어갑니다. 늦어도 그전에 처리된다고 우리가 봐도 미국의 사정을 보고, 미국의 그런 과정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상정을 해서 토론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송민순 의원 그다음에 제가 이 국회에 와서 보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들이 너무 다릅니다.

2008년 민주당이, 본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은 2007년 6월에 체결한 원안을 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백악관이 의회에 당시 원안을 송부하면 민주당은 늦어도 1개월 내

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동의하겠다 이렇게 성명을 다 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것을 미국 것을 보고 하자고 그랬는데 상임위에서 강행 통과하면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마치 당시 민주당이 2007년 6월 원안을 반대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당시 기록을 한번 다시 보시고……

○국무총리 김황식 제 말씀의 취지는 전략상 미국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 없이 우리가 먼저 해 놓으면 미국을 구속할 수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민순 의원 총리님,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면 당시 정부의 그 전략은 완전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됐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제가 소박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때 우리가 비준동의안이 처리가 됐다고 한다면 과연 미국에서 어떻게 나왔을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우방국하고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그렇지 않고 새롭게 더 강력하게 재협상을 구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송민순 의원 총리님, 그 당시 미국은 우리 국회에서 이렇게, 우리 정부가, 국회가 졸급하게 하니까 오히려 미국 의회와 정부가 서로 손을 잡고 우리를 많이 활용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송민순 의원 2007년 6월에 원안이 타결됐고 상당히 균형된 타결 안이고 본 의원은 그것을 적극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에 이것을 바꿨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미 간의 경제에, 한미 간의 정치에, 무역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어떤 취지의 말씀……

○송민순 의원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재협상을 해서 균형을 무너뜨렸느냐 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원래 한미 FTA안에 관여하지 않았던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오바마 정권의 지지 기반인 자동차노조라든지 이런 쪽의 상당한 주장, 압박이 있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송민순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민순 의원 소위 말하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사정변경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민순 의원 국제관계에 있어서 사정변경이 되면, 특히 동맹국 사이에, 그것은 서로 이해를 해 줘야 됩니다.

미국이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도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다.

총리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미 FTA를 추진한 여러 가지 동인 중에서 가장 큰 경제적 동인은 우리의 제조업 수출을,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두 번째로 미국의 선진된 금융산업을 우리한테 도입을 해서 우리 금융산업을 발전시킨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도입하려고 했던 미국의 금융산업이 실제로는 알고 보니까 세계 금융위기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여기에서 미치는 폐해, 지금 우리가 세계에서 파생산업의 건수가 제일 많은 나라라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민순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안전장치, 지금 있는 안전장치는 그렇게 확실치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하나의 불이라고 그러면 그 불이 들어오는 때, 위기가 될 때는 여기에서 확고하게 차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자, 이렇게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고 그것이 저울의 균형을 맞추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이야기를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미 FTA의 앞으로의 처리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융위기에 대한, 금융위기로 번져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다시 말해서 방화벽을 강화하십시오.

그것 강화하는 방법은 외교통상부의 협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기술이 있을 겁니다. 외교에 있어서 협상하는 방식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방식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길은 있습니다. 그것을 만드시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균형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TAA, 무역구조조정지원에 관한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민순 의원 지금 무역구조조정지원이 우리 한국의 제도와 미국의 제도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혹시 총리님 아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민순 의원 잘 모르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민순 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있어서 무역으로 인한 환경 변화로, 거기에 대해서 손실을 봐서 지원해 주는 조건이 6개월 동안 25%의 매출이 삭감됐을 때 구조조정 지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5%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로 중소기업들인데 중소기업들이 6개월 동안 매출이 25% 감축되면 그것은 사실 기업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5% 내려갔을 때 지원하는데 우리는 25% 내려가야 지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업이 빈혈 상태가 됐을 때 수혈을 해 주자는 건데 우리의 경우는 기업이 빈사 상태에 들어가야 그때 가서 수혈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조정,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분야를 포함한 구조조정 문제를 이렇게 확고히 장치를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진전 상황을 봐가면서 한미 FTA를 여기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이러한 장치를, 조금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야기하셨지만 여·야·정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국정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데 총리께서 앞장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들, 아쉬운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하지만 제가 기본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협상이라는 것은 각 부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어느 쪽 부분은 제대로 우리가 챙길 것은 챙기고 또 어느 쪽은 조금은 양보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익의 균형을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우리가 재협상 과정에서는 경쟁력 있는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는 미 측의 우려를 어느 정도, 관세 유예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양보한 듯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분야에 관해서는 다소 양보를 했다 하더라도 자동차 업계에서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감내하고 빨리 FTA가 체결돼 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누렸으면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밖에 양돈산업이나 제약산업이나 현지 주재원 비자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얻은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균형은 마련된 건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은 정부 내에서 또 관심을 갖고 통상교섭본부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FTA가, 지금 세계 경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경쟁하는 상태에서 선점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논의되는 가운데 빨리 처리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뭐 여론에 의해서 반드시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6 대 2 이 정도로 국민 여론은 FTA의 조속한 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의원 총리님, 우리 자동차 업계도요, 지금 재협상된 안보다 원안을 더 좋아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이지요, 그렇습니다.

○송민순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민순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도 우리 정부와 우리 의회를 상대로 협상을 해야 되는 이 정도의, 협상의 기법에 있어서 균형도 맞아야 된다는 점을 잘 생각하시고……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송민순 의원 의회의 존재가 뭐라는 것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으로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개방해서 북한이 우리와 함께 평화롭게 살도록 바꾸거나, 아니면 북한의 정권 자체가 종식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민순 의원 같은 생각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권의 종식 그런 차원보다도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와 가지고 주민 삶이 높아지고 또 남북한 간에 상생·공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송민순 의원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 반 동안에 우리의 대북정책 결과 북한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경색돼서 우리의 당초 계획이 아직은 성과를 못 보고 있다, 현상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송민순 의원 아직은 성과를 못 보면 언제쯤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북한의 입장이나 태도는 과거 십수년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MB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이것이 바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리라고는 짧은 시간에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종래 수십년 동안에 해 온 그런 방식 내지는 북한의 태도 이런 것을 변화로 이끌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 나가면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민순 의원 총리님, 정부는 동기보다는 결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당연한 말씀이지요.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의 남북관계가 영원히, 한반도의 평화가 영원히 존속돼야 하는 이런 과정에서 보면 2~3년 사이에 성과가 없었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성과가 안 나타났으니까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실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송민순 의원 지난 3년 반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그러면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하튼 정부는 물론 국가 또 사회, 정당들이 다 노력을 해서 남북관계 경색을 풀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민순 의원 지금 그 사이에 북한의 상황은 사실 더 악화되었지요? 북한주민들은 더 핍박받고 참상에 시달려야 되고 북한의 핵무기는 계속 개발되고 또 북한은 다른 데 숨쉴 곳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곳이 중국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현재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도 어떻게 하면 북한과의 경색관계를 풀고 대화를 해서 정말 명분 있게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정부로서도, 우리 국민으로서도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도왔으면 좋겠다, 도울 수 있는 명분이 확실히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국민의 상당수는 적어도 북한이 남한의 호의에 어느 정도 호응하면서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희태 의장, 정의화 부의장과 사회교대)

○송민순 의원 총리님, 북한은 말씀이지요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정권, 집단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지 북한이 그렇게 합리적이고, 지금 총리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행동양식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라고 해서 정책을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요, 지금 북한의 정권이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비핵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호의를 가지고 돕더라도 우리는 항상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군사적으로 철저히 대비를 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기본적인 그러한 사고나 행태를 바꾸는 노력도 다소의 경색의 위험이라든지 다른 군사적인 도발의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원칙을 세우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송민순 의원 총리님, 한반도에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어떤……

○송민순 의원 한반도에서 주인이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 대한민국이지요.

○송민순 의원 그렇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민순 의원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은 한반도라는 집안을 관리할 종국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제대로 할 때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현 정부가 그러한 주인의식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저로서는 한반도가, 우리 대한민국이 주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한반도, 특히 대북한 관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행해졌던 그러한 북한의 행태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 주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송민순 의원 그런데 그 노력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로서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해서 또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최근에 발표된 바와 같은 대북 접촉도 시도를 하고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의 강고한 그런 태도나 북한의 입장 때문에 아직 실효를 거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계속해서 대화의 문을 열고 노력을 하면 실효성 있는 결과가—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민순 의원 지금 총리님이나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고 관계없이 국제사회에 비추어지는 형국은 남과 북이 1 대 1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주인 아닌 사람하고 그렇게 1 대 1로 티격태격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주인은 주인답게 의연하게 처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북한, 동포이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우리가 챙겨야 될 대목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적어도 우리가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명분은 찾아가면서 해야지 그야말로 햇볕정책이나……

참 선의에서 시작된 정책이지만 그것이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방향을 돌려 가지고 주인으로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남북 경색 그리고 북한의 문제를 우리가 동포애로써 껴안아야 하는 그런 정신은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민순 의원 정신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실행을 해야지요.

총리님, 지금 근세 세계사에 있어서 말씀이죠 고립과 압박 속에서 독재국가나 폐쇄국가가 개혁·개방하고 체제 변경을 한 사례가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최근의 북아프리카나 중동 사태도 국민을 압박하면서 국민을 굶주리는 그런 정권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교훈 아니겠습니까?

○송민순 의원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는 긴 이야기고요, 다른 나라들이 동구에서 정권이 붕괴된 경우하고 북한이 붕괴된 경우는 지정학적 환경이 원천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그 동구도 개혁·개방을 위해서 유럽과 서유럽과 많은 접촉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처럼 고립과 압박 속에서 변화를 선택한 나라가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그래서 이제 북한도 중국을 수차 방문을 한다든지 중국 지도자들도 북한을 이렇게 고립으로부터 나오도록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의원 그런데 정책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혼선을 겪고 있고, 지금 보이기에는 말씀이죠 꼭 우리 정부가 축구경기 90분 있는데 후반에 가서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굉장히 득점욕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당황하다

가 실점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 저는 정말 이게 더 추가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정책을 구체적으로 취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원칙을 가지고 해 나가다 국민의 동의를 얻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애당초 기대했던 성과가 이 시점에서 안 나타났다고 해 가지고 정부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든지 하는 것은 더 혼란, 또 북한에 대해서 더 나쁜 시그널을 제공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입장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되 큰 틀 안에서 말하자면 유연한 남북 대화를, 또 경색을 풀기 위한 각종의 노력을 여하튼 포기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해서는 정권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민순 의원 지금 총리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방향인데 정부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그 반대로 가기 때문에 많은 국내외적으로 혼선을 일으키고 우려하는 겁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비밀, 북한의 성명에 의해서 그게 공개됐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민순 의원 다음, 고엽제하고 SOFA 문제가 지금 총리님께서도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일 텐데요, 지금 한미 간에 있는 SOFA로도 당장의 시급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 법령을 존중하게 되어 있고 양국 간의 기준 중에서도 강한 것을 더 적용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급한 것은, 빨리 조사하고 있는 것은 치유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하시고요.

지금 우리의 환경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보전·관리하는 차원에서 됐지만 우리 환경법 자체가 예방적 개념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평택에 350만 평의 새 땅을 제공하게 되어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송민순 의원 새로 제공하는 기지에 대해서는 제공 당시의 환경을 측정을 해서 그 기준을 정해 놓고 다음에 미국이 사용하고 돌려줄 때는 인위적으로 훼손된 부분은 미국이 책임지고 치유를 해서 돌려주는 이런 방향으로 SOFA를 개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알기로는 신규로 공여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도 일응 환경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기지에 대해서 환경조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확실히 해서 나중에 반환받을 때에 혹시 차이가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순 의원 그것은 법적으로 합의를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송민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큰 교훈의 하나는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쟁을 끝내는 것 또한 외교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은 한반도에서의 현 상황에 주는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외교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두 개의 틀을 끌고 가야 합니다. 하나는 남북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관계입니다. 이 두 개의 틀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평화와 국운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비현실적인 구호나 이번의 선전·폭로전과 같이 무언가 큰 것 하나 이런 것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하겠다는 데 집착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의 단계적 발전이나 점진적 사회문화 교류 확대와 같이 거창하지는 않지만 의미 있는 남북관계 진전을, 방안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송민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갑 출신의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의원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울 강서갑 출신의 구상찬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성황리에 개최되었던 G20 정상회의가 또 얼마 전에 있었던 G20 국회의장 회의가 대한민국의 변화된 위상을 말해 주고 있다고 정부가 자랑했던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틀 전 정상회담을 구걸했다는 또 정상회담을 위해 돈 봉투를 꺼냈다는 북한의 주장으로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몇 주 전에는 김정은의 단독 방중이라고 청와대에서 잘못 확인해 주는 바람에 우리 언론은 물론 세계 각국의 외신들까지 엄청난 오보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바람에 우리는 세계 각국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총탄이 퍼붓는 전투 중에도 비선은 존재해 왔고 유사시에도 핫라인은 늘 있어 왔습니다. 그 비선을 노출한 북한은 비겁하기 짝이 없고 상도의도 없는 패륜집단입니다. 이런 한심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과 대화와 공생까지 같이해야 하는 숙명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이런 일들을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사과를 받기 위해 비밀접촉을 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정부, 즉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햇볕정책이 핵 위기를 자초하였고 엄청난 돈을 퍼주고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수없이 비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니까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핵 폐기는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국제적 노력으로 힘들게 마련한 6자회담 재개는 어설픈 북경 비밀접촉으로 파국 선언을 맞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군은 또 어떻습니까?

천안함 폭침 사건 때 북한의 도발 저지와 철저한 응징을 다짐했지만 연평도는 또다시 포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작금 논의되는 국방개혁 논란을 보면 전투력 강화 방안을 찾기 위한 합리적인 논의보다는 군 고위층의 기득권 싸움만 국민들의 눈에 비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외교안보 정책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과 후진적 외교 행태의 원인을 따져 보면 기존 질서에 안주하려는 기득권 집단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비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패와 부조리가 드러나도 개선한다는 시늉만 할 뿐입니다.

국가 안보와 외교는 국가 존망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책임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과 자리 보전에만 집착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지금까지의 대북관계, 외교안보 정책 전반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세로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외교안보 분야의 제2의 6·29 선언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대북 정책, 안보 정책, 북한 핵 정책에 대해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을 담은 제2의 6·29 선언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이것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사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성토와 엄중 경고는 줄을 이었지만 우리 경계 태세나 준비 태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철저한 자기반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 그리고 일관성 유지를 높게 평가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엊그제 북한의 발표를 보면서 정부에 속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건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제발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을 가지자, 오고간 내용을 비밀에 부쳐 달라'며 남북대화를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돈 봉투까지 건넸다가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성과를 내기 위한 진정성 없는 대화, 정치적 필요에 의한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 의원은 남북 간에 물밑에서 하는 비밀 접촉은 필요할 수도 있고 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본 의원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번 북경 비밀회담에 대해 남과 북이 서로의 기존 관례를 깨고 비밀회담 사실을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지난 18일 베를린 제안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히며 북경에서 북한과 접촉 사실을 언론에 흘렸습니다.

총리!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공개 접촉 내용을 샅샅이 공개한 것도 상식 밖의 일이지만 우리 정부가 5월 중순부터 공개, 비공개를 통해서 북경 비밀 접촉을 언급한 것 역시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외교적 관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남북관계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혹시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일부 외교안보라인에 있는 비서관들이 개인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행동한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사건의 시인·사과 없이는 절대로 대화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 굴욕적인 대화를 추진한 우리 정부의 비겁함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제발 북쪽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지만 남쪽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만들어 놓자'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코미디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총리!

이러한 정부와 일부 관료들의 이중적 태도가 북한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차라리 원칙을 고수했다면 이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래도 대북 정책에 있어서 이전 정부와 다르게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았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번 북경 비밀회담을 계기로 이명박 정권의 정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다시 도로 전 정권으로 돌아가 버린 도루묵 정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나오십시오.

총리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언론에 비밀접촉을 공개할 정도라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 보고받은 대로, 아시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구상찬 의원님이 애써 강조하신 그러한 돈봉투, 구걸 등등의 말씀은 그건 정말 북한에서 밝힌 그 내용이 100% 사실인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왜곡돼 있는 이런 부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부로서는 어떻게든지 남북관계 경색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북한의 변화된 자세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국회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성을, 또 2개 사건에 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사과를 유도해서 북한에 명분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은 계속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고, 또 이와 같은 접촉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지 결코 지금 말씀하신 북한에서 발표한 것과 같이 왜곡하거나 애걸하거나 돈봉투로 매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상찬 의원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돈 봉투라든지 구걸이라든지 우리의 일관성을 깨뜨리고 품격을 깨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지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구상찬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총리 들어가시고, 통일부장관 나오십시오.

장관, 북경 비밀회담과 관련해서 남쪽과 북쪽 중에 누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아까 구상찬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 비공개 접촉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이런 무책임한 폭로 행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에서 볼 때 어떠어떠하고 남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한 문구를,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북한의 폭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저잣거리에나 있을 법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천안함·연평도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주장을 해 왔던 정부가 아무리 비공개 접촉에서라도 그러한 주장을 했겠습니까?

어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정부는 매우 높은 수준의 분명한 시인·사과, 재발방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일관하게 얘기를 했고 그것이 지난번 접촉의 주된 내용이다, 그것을 위해서 접촉을 했고 만났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누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북은 폭로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 폭로의 의도가 뭡니까? 우리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결과적으로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통전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는 지난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에 일관되게 얘기해 왔던 그 원칙의 라인에 서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걸복걸, 우리가 애걸복걸했다면 과연 북한이 이런 식으로 폭로를 했겠습니까? 당당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게 북한 내부의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행태로 나왔다, 이것은 저는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지난 18일 베를린 제안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했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먼저 접촉 사실을 우리 남한에서 흘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의를, 그러니까 '베를린 선언의 진의를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이런 비공개 접촉 내용을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베를린 선언, '비핵화를 하면 내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 그런 내용의 진의를 일단 본국을 통해서……

○구상찬 의원 장관께서는 공개된 접촉이라고 보십니까? 그 접촉이 공개된 접촉이라고 보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우리가 우리의 진의를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비공개 접촉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베를린 선언의 내용 진의를 우리가 적절하게 전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상찬 의원 적절하게 전달했지만 비밀접촉을 먼저 흘린 것은 남한, 우리 쪽이 먼저 했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공개 접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구상찬 의원 좋습니다. 시각이 다르니까 다시 한번 따져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 지금까지 북한의 비밀회담 주체가 통일전선부였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에는, 물론 그렇습니다. 통일전선부가 대체적으로 대남, 또 접촉, 회담을 할 때 나서는 그런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상찬 의원 그런데 최근에 국방위원회로, 이번 발표도 국방위원회가 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어제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북한이 그런 비상식적인 행태를 한다고 해서 우리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그 내용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또 이런저런 것을 맞대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번에, 어떤 쪽에서 어떻게 나왔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찬 의원 자기반성 없이 대북 규탄에만 전력을 기울인 안보 당국자들의 무사안일이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낳았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북정책 실패를 자초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장관께서 강경파로 분류되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저는 뭐 강경파다

또는 온건파다 또 원칙이다 뭐 협상, 대화다 이런 이분법적 분류를, 그 안에 저를 포함시키고 싶지도 않고 또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 어느 누구도 그 속에, 그런 이분법적인 틀에 포함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의 어떤 기본적인 대북정책의 시각은 그야말로 남북관계를 보다 정상적인 그런 관계로 돌려놔야 된다, 그 정상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한걸음 한걸음이라도 비핵화에 더 다가서고 또 개혁과 개방으로 나와서 세계 조류와 같이해야 북한도 살 것 아니냐……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그런 쪽으로 북한을 유도하고 또 그렇게 나온다면 당연히 남북이 협력해서 그야말로 북한도 잘 살고 우리도 세계 최일류 선진국가로 가는 그것이 그야말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바른 길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대북정책을 해 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무슨 강경파가 있고 거기에 무슨 온건파가 있고 거기에 무슨 원칙파가 있고 거기에 무슨 대화파가 있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향해서 저희 외교안보 라인 전체가 같이 합심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장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그 일관성마저 흔들린 듯한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부처 간에 따로, 당국자 간에 따로, 서로 다른 발언이 따로따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외교부의 모 본부장이 연평도·천안함 사건의 시인·사과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직후에 통일부장관은 연평도·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 약속,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확인돼야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다시 지난 4월에 연평도·천안함 시인 사과가 6자회담 재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고 통일부장관과 다른 얘기를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이 논란이 확산되니까 청와대에서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가시적인 것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어렵다고 정리함으로써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김정일 북경 방문에서도 청와대는 김정은 단독 방중이라고 브리핑을 하고 외통부와 통일부는 김정일이 갔다고 얘길 하고,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각자 따로따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장·차관들조차도 대북정책에 대해 따로따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는 '따로국밥 정부'라고 얘길 하는 겁니다.

김정일 중국 방문에 대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김정일의 북경 방문을 잘못 보도한 톱기사가 8시간을 못 넘기고 오보로 판명된 그 해프닝의 주인공은 바로 청와대라는 것입니다. 확인도 안 된 정보를 청와대 비서관들이 떠드는 바람에 외신들이 오보를 한 것입니다. 중요 사안을 사전에 통지 받지도 못하는 한중 관계, 대 중국 외교의 참담한 현실을 통렬히 반성해도 모자랄 청와대 비서관이 마구잡이로 떠든 탓에 전세계에 우리는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의 원인은 개인적인 욕심과 외교안보 라인의 혼선에 있다고 봅니다. 또 청와대와 부처 간의 의견 조율이나 정보 공유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나오십시오.

청와대 비서관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뭐 그날 어쨌든 언론에 약간의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중국에서 바로 통보를 받고 통보 받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구상찬 의원 김정일의 중국 방문에 대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중국 후진타오 주석을 배출한 공청단 계열의 후진타오 현 정부는 김정은 세습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3대 세습을 반대하는 후진타오 주석 등 공청단 계열을 피해 상해방 출신인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미래 권력에 접근하여서 체제 안정과 세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북한이 갑작스럽게 북경 비밀 접촉을 공개한 것은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6자회담 재개에 목말라 하는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지원과 3대 세습을 보장해 주지 않는 현 후진타오

중국 정부와 화끈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이명박 정부를 동시에 거부하고 다음 차기 정권과 통 큰 담판을 짓겠다는 김정일의 도박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뭐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제가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말씀하신 전체에 대해서 다 꼭…… 뭐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상찬 의원 외교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장관 취임 이후에 지난 2월에는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이 발생하였고 3월에는 몽골 전 대사가 현지 직원과의 애정 문제로 옷을 벗었습니다. 또 5월에는 아프리카 지역의 한 대사가 귀국 이삿짐을 통해 상아를 밀반입하려다가 관세청에 적발이 됐습니다.

장관의 이런 쉼 없는 노력과 상관없이 재외공관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 답변해 보십시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해 온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일종의 저는 개인들이 저희 잔디밭에 있는 잡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초는 보이는 대로 계속 뽑아 나가면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분석합니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상하이 스캔들의 조치를 보면 문제된 총영사는 해임, 또 문제의 박모 영사는 3개월 감봉 그뿐입니다. 나머지 9명에게 내린 벌은 죄를 묻지 않는다는 불문조치였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경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강등 조치가 있었습니다.

○구상찬 의원 인사 비리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처럼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조사 결과들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벌백계의 엄정한 문책과 책임 규명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장관님.

장관께서 외교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다시 한번 엄정한 잣대를 들어야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이런 조치는 자기반성 없고 자기 책임이 없이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하려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외교부가 또다시 보일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벌백계를 시행하겠습니다.

○구상찬 의원 예, 장관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질의 시간 대부분을 할애해서 남북한 비밀 접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분노와 허탈감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교체를 포함한 후속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수습하느냐는 정부의 몫입니다.

어떤 교훈을 얻느냐에 따라 실패도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잘못된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긴 호흡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외교를 조망하면서 내부 공직기강을 비롯해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정상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것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넘어진 후에 일어나지 못한 것이 실패입니다. 또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지요.

국민과 함께,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구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인천 계양갑 출신의 민주당 신학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용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인천 계양갑구 출신 신학용 의원입니다.

현 정부는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경제는 최악이고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고 대통령께서는 '반값등록금 공약 언제

했느냐’ 나 몰라라 하고 계십니다.

반값등록금,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제가 재작년 2월 발의한 고등교육장학재정교부금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당장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 정권 초기부터 지적되던 큰 사안입니다. 2008년에는 경기부양을 해야 한다면서 부실을 꽉 덮어 두고 2009년에는 G20에 방해된다면서 부실을 더 키웠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괜찮다고 하면서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앞두고 몰래 돈을 빼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민들만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인 감사위원이 저축은행 비리로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이상 대통령께서는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 ‘지난 정권 탓입니다’, 자나 깨나 앞으로도 더할 겁니다. 그게 집권 4년차 정권이 할 일입니까?

외교안보 분야, 국정난맥상 가관입니다.

얼마 전 상하이 주재 외교관들이 덩신밍이라는 중국 유부녀에게 농락당했습니다. 국방 분야 핵심무기들이 연달아 고장과 불량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초래하고 했습니다.

군 면제자들로 구성된 청와대 안보외교 라인은 막무가내로 국방개혁안을 밀어붙이며 이에 반대하는 현역 장성들을 항명죄로 다스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문제의 그 인사, 급기야 비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제발 정상회담을 해 달라. 북한에는 사과가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문구를 써 달라’, 정말 굴욕적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심지어 돈봉투까지 건네주려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비현실적인 비핵 개방 3000, 그 정책의 성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국격입니까?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런 정부를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만 무능한 줄 안 건 이미 옛날에 알았고요. 자, 외교·안보·통일 분야, 지금 대북 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왔다는 것 아까 시인하셨습니다.

이런 분야의 국정 전반에 걸쳐서 난맥상이 나타났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남북관계가 우리의 원칙과 일관성 있는 자세 때문에 아직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실패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번 대북 접촉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사실 관계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전제로 이야기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그걸 100% ‘돈봉투’ ‘구걸’ 이런 것을 지금 북한에서 보고 들으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렇다면 다 부인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돈봉투나 그쪽에서 보면 사과가 아니고 이쪽에서 보면 사과인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신학용 의원 외교부장관 나와 주세요.

대중국 외교, 엄청나게 중요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신학용 의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현재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용 의원 그러니까 굉장히 악화됐다고 보시고 계시는 거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악화됐다는 것보다도 작년 한 해 동안 천안함·연평도 사건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입장이 달랐지만 전반적인 한중 관계는 잘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덩신밍, 조사해 봤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덩신밍은 저희가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런 능력도 없는 외교부……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외국인은 누구도 조사 못 합니다. 외국, 중국 정부가 와도……

○신학용 의원 외교 관계가 잘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 조사도 못 하고……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중국 사람……

○신학용 의원 그래 갖고 총리실에서 11명 징계하라 그랬더니 2명 징계하고 나머지는 불문처리……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불문, 그건 아니고요. 경고·주의를 줬는데 저희가 6명 중징계, 6명 경징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징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신학용 의원 지금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할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한중 FTA의 추진 가능성 언급하셨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신학용 의원 외교부도 준비하고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양쪽 실무자 사이에 지금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현 정부 임기 중에 한중 FTA 협상을 타결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시한을 설정한 바가 없습니다.

○신학용 의원 시한을 설정한 것 없고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러면 이런 전략에 대해서 보안이 정말 중요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기본적으로 보안은 좀 지켜져야 될 걸로 봅니다.

○신학용 의원 2009년 4월 2일 런던 G20 정상회의 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신학용 의원 그런데 2009년 2월경, 그러니까 4월 2일 런던 G20 정상회의인데 2009년 2월경에 우리 정부의 외교기밀인 G20 런던 금융경제정상회의 대비안이 해킹돼서 중국으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계세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저로서는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용 의원 파악 못 했어요? 그 당시 외교안보수석이었잖아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 대비반이 청와대 기재부 외교부였습니다, 그렇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신학용 의원 맞습니다. 지금 외교부에 알아보니까 해킹이나 기밀 유출을 당한 적이 없다는 답변만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기관이 저한테 거짓 보고했네요? 정보기관에 따르면 해킹 사실을 감지하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결국 외교부는 해킹 당한 줄도 몰랐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외교부에서 해킹을 당한 것인지, 아니면 뭐 다른 부처도 있고 또 실제 해킹을 당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런데 정보기관에서 이미 통보다 합니다, 해킹 당하자마자. 까마득히 몰라요.

그 결과가 어떠냐? G20 런던회의 이후 2009년 4월 6일 외교통상부와 주중대사관 간에 공문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께서는 그 최종 합의안 도출과 관련해서 중국이 G20에 큰 역할을 해 줬다고 이렇게 아주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 우리 정부의 전략을 훤히 알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G20는 다자 무대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뭘 결정하는 곳은 아닙니다.

○신학용 의원 참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통보를 해도 여기에 대한 대비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몽창 해킹 당한 것에 대해서 중국에 항의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외교부의 현 실태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저희로서는 해킹 당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항의를 해야 될지……

○신학용 의원 지금 무조건 부인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아니요,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용 의원 오늘 아침 신문에 났습니다. 구글의 이메일, 우리 고위공무원들 해킹 당하고 있답니다, 지금.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어저께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통보를 그쪽에서 받았습니다.

○신학용 의원 여기에 대해서도 항의할 계획 없으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쪽에서 사전에 해킹 시도가 있으니까 패스워드를 바꾸라는 그런 통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신학용 의원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거짓말 또는 궤변을 너무나 잘하십니다. 북한의 폭로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신학용 의원 이때까지 뭘 했길래 더 발전할 게 뭐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그와 같은 북한의 폭로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상 있어 보지도 않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은 그렇지 않다……

○신학용 의원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에서 이런 돌발적인 사태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지, 남북관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앞으로 더 이상 뭘 발전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때까지 후퇴만 하고 기다리는 장관 아니셨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그 답변도 저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 폭로 자체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그게 이상하다, 그것은 동의할 수……

○신학용 의원 통일부장관께서는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답변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북한의 사과만 받아 내기 위한 회담이었다, 결코 정상회담을 위해 접촉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난번 비밀, 비공개 접촉의 주된 목적이 여러 번 말씀드렸드렸습니다마는 천안함 연평도 시인·사과, 재발 방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 내기 위해서 만났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신학용 의원 우선 따집시다.

비공개 회담, 비밀 접촉 어느 게 맞습니까?

비공개는요, 만남이 다 알려졌는데 외부에 공개를 안 하는 게 비공개이고 비밀은 그 만나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거예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우리 신 의원님의 개념이시고요. 저희들은 통상 그와 같은 접촉을 비공개 접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학용 의원 아니, 통상적인 이런 용어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알겠습니다.

자, 5월 19일 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 비밀 접촉 시인했어요. 왜 비밀 접촉 했느냐, 베를린 선언 내용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베를린 선언 내용이 뭡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베를린 선언 내용은 비핵화를 하면 내년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러니까 지금 6월·8월 달 회담 제안설, 3월 달 핵안보회의에 초청하겠다는 그게 다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제안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개적으로……

○신학용 의원 이것을 눈 가리고 아웅 하십니까?

청와대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통일부장관께서는 극구 부인하고……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장관의 국회 답변을 위해서 통일부 직원들이 작성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답변 자세'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내부 문건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연평도 사건 등과 무관하게 정상회담을 정식 제의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라고 돼 있어요.

있는 거 아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그 문건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이 내용은요, 결국은……

○통일부장관 현인택 어떻게 저도 모르는 문건을 신 의원님이 갖고 계십니까?

○신학용 의원 그러면 직원들이 써 주는 모범답안은 하나도 안 본다는 뜻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학용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나 이상하게 답변할까봐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 북한 사과 또는 유감 표명 시에는 정상회담 제안을 한 것,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을 거꾸로 해 버리면.

비밀 회담 주체가 누구입니까?

통일부입니까, 청와대입니까, 국정원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당일 김태호 비서관 대통령 수행했다면서요, 베를린 갈 때?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예, 발표 다 된 거예요, 언론에 나온 거예요.

대통령은 남고 그 비서관은 베이징으로 가고 나머지 두 사람은 와 있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 주축이 된 것 같은

데 또 통일부가 주축이 됐다고 지금 이야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누가 이번 비밀 접촉의 주 업무였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 말씀은 저희가 비공개 접촉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아, 그것을 양해할 일이 아니지요.

이렇게 까발려졌는데도 그런 쉬운 것도 답변 못 하겠다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까, 이것이?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실무자들 회담, 비밀 접촉에 또는 비공개 접촉에 나간 그 실무자들을 제가 일일이 누구, 누가 나갔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그간에 저희들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아니, 그러면 누가 주체가 됐느냐 이거지요. 통일부예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 뭐……

○신학용 의원 왜냐하면 알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벌써 그런 선언을 할 걸 미리 알려 주기 위해서 갔다 그랬어요. 그것도 틀린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거는……

○신학용 의원 그렇다면 뭔가 사전에 접촉을 해 가지고 예정돼 있던 겁니다.

그것도 부정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어쨌든 어디가 주체냐 또 누가……

○신학용 의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나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기로 했으면, 베이징에서 만나기로 했다면 그전에 접촉이 있었을 거고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사전에 알려 줬다, 베를린 선언을 자신 있게 발표하면서, 그동안 똑같은 거였습니다. 그것을 알려 주면서 자신 있게 사전에 알려 줬다 하면서, 그게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비밀 접촉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아름다운 청사진이 그려졌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했겠어요? 이미 다 스케줄 돼 있는 대로 그려 놓고 기획된 비밀 회담입니다, 접촉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 물론……

○신학용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왜, 지금 극구 아니라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위한 그런 접촉이 아니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연유로 짜맞추게끔 그렇게 만났다 이겁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거를.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러니까 소위 베를린 선언이라고 하는 그 내용,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 그것하고 지금 이 비공개 접촉하고는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의 진의를 북쪽에 전달했다, 그것이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고요. 비공개 접촉과 또 베를린선언과 이것이 연관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스케줄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뭔가 통일부장관은 보고를 받고 '아, 이번에는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하에서 그런 접촉을 했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런 접촉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베를린선언을 사전에 통지하는 그런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그래 놓고 지금 몽땅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 대답도 안 해 주고.

대답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베를린선언을 사전에 통보했다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그러면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발표한 것 거짓말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 그것은……

○신학용 의원 이것 서로 그냥 아주 엇박자가 나요, 지금.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닙니다. 우리가 베를린 선언에 대한 우리의 진의를 북에다가 알아듣도록 전달했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 가지 남북 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랬다, 그런 말씀을……

○신학용 의원 그러니까 사전에 아무 내용도 없이 그저 '우리 베를린선언 할 건데 갖다 줄게.' 하니까 만나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 여러 차례의 접촉이 있었을 거다. 그게 뭐냐?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 아니냐?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둘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신학용 의원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어느 말을 믿겠습니까? 국민을 이렇게…… 어떻게 정부를 믿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만난, 어제 이석현 의원님께서 이야기하니까 합법이라고 그러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신학용 의원 무슨 근거로 합법입니까?

지금 임명장 주셨습니까?

안 주었다 그럽디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신학용 의원 비밀 회담에 임명장도 안 주고 북한이 우리 남한 누구, 뭘 믿고 접촉을 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 그것은……

○신학용 의원 임명장 주고 그래야 그 사람들도 확인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전부터 몇 번 만났기 때문에 그것 없이 간 거냐, 어느 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비공개 접촉에서 그런……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접촉이나 회담이 있을 때 물론 임명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회담 대표는 누가 임명하느냐 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수 있고 또 통일부장관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정부를 대표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 북한과 교섭 또 회담하는 행위,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우리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임명장을 주어야 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다.

다만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관계 또 여러 가지 기관장과 협의를 해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임명장은 수여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용 의원 우리 정부의 의견을, 북한 정부 당국자에게 보낼 의사를 전달하는데 임명장도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남북관계 발전법에 위배됩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지 않……

○신학용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께서 내년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을 초청한 것 또 비밀리에 정상회담 추진을 한 것은 그동안 어떠한 반전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보고가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남북 협의가 잘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도했다가 안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답변해 주세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정상회담을 위한 지난번…… 비공개 접촉이 아니고, 물론 정상회담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분명한 시인, 사과, 재발방지와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남북대화가 고위급회담을 거쳐서 또 정상회담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매우 단계적인 그런 합의과정과 또 합의과정이 있은 이후에도 대화를 통한 또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정상회담도 물론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은……

○신학용 의원 제가 일련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러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까 저렇다.

국민에게 너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됐습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임기 말에 국면 전환용 또 반전 카드로서 남북정상회담 건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거래는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줄기차게 야당, '남북정상회담해라. 빨리빨리 해라.' 그렇게 해도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 코앞에 들어서 이중적 플레이로 또 무리수를 두면서 하니까 국제적 망신만 당했습니다.

자, 남북관계 최악이라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신학용 의원 남북관계는 최악이다.

○국무총리 김황식 최악보다도 경색되어 있는 상태다……

○신학용 의원 이보다 더 나쁜 적이 있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더 나쁜 경우도 있었지요.

○신학용 의원 언제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마는……

지금 그래도 개성공단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신학용 의원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까지 폐쇄했다가는……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신학용 의원 그 많은 중소업자들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친구들이 그 멀리 떨어져 후퇴만 한 것도 우리한테 큰 안보상의 이익입니다. 그러면 파탄 국면으로 지금 몰고 갔다, 그동안 통일부가 한 일은 기다리는 정책에다가 점점 악화만 시켜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모든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용 의원 이제는 통일부장관 사퇴할 때 됐습니다. 건의하세요. 더 이상 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새 인물 한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 가지고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

○신학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잘 들었습니다.

○신학용 의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신학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수원 권선 출신의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경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는 수원 권선구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미경입니다.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국도 베트남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찬가지로 첨단무기로 무장했던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국가 안보나 전쟁에서의 승리는 첨단무기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지키겠다는 진정한 애국심과 정신력입니다.

지난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무력도발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방과 안보에 대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사라지면서 우리 군 장병들도 국가 안보에 대한 신념과 정신력이 많이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다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기본부터 검토해 볼 순간이 온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올해부터 고등학교에서 사용 중인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봤더니 남북분단을 남한의 책임으로 몰아가고(미래엔컬처그룹 교과서), 그다음에 6·25전쟁 중에 발생한 학살의 책임을 남한과 미국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비춰지는 내용이고(삼화출판사 교과서), 반면 북한의 공개 처형과 정치범수용소, 아웅산 국립묘소 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전혀 나오지 않거나 한 군데만 기록되었습니다. 북괴의 도발행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이 내용만 보면 언뜻 북한이 집필한 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북한 쪽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제기되는 그런, 의원님께서 제기하는 그런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국사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집필진이 전교조 소속 회원이 많고, 더구나 놀라운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해 달라는 권고에 대해서 거부한 교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전체 국사 교과서 집필진 중에 전교조 출신 집필진이 한 25%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정권고에 대해서 거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이 왜곡된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실 건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왜곡은 바로잡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교과서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미경 의원 왜곡을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교과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 교과서의 균형성과 정확성을 위한 검정기준 및 집필기준을 잘 정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미경 의원 이 교과서 정부가 지금 승인해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다음 조치로 인해서 이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그런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 교과부장관은 저작자나 발행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요.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검정 합격의 취소 등의 조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교과서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나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수정에 관한 일체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정미경 의원 제가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한국사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것인 양 표현하면 그것 승인 안 해 주시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미경 의원 당장 해야 되는 것이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미경 의원 행정안전부가 2010년 6월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서울의 초·중·고교생 가운데 35.1%는 남한이 6·25를 일으킨 것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학생들이 정확한 역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느낍니다.

○정미경 의원 진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이 일으킨 6·25전쟁을 마치 우리 책임인 것처럼 되어 있는 교과서를 우리가 좌편향 교과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좌편향이 아니고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걸 막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아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왜곡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반드시 바로잡아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미경 의원 저의 지역인 수원 권선구는 전투비행장이 있습니다. 요즘 군 비행장 소음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간에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대법관을 하셨으니 더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수원의 경우 대법원은 85웨클(WECPNL)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판단해서 기각해서 배상 받지 못했습니다. 판결은 이론적으로 일정한 기준으로 잘랐겠지만 현실은 매우 복잡합니다. 바로 옆집에서 배상을 받는데 그 옆집은 배상받지 못해서 주민들 간에 분열이 심각합니다.

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같은데 판결은 한쪽은 배상하라고 하고 그 옆집은 참으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판결을 수긍하라고 판결하는 건지……

정부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일정한 소음 정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일단 대법원 판결은 존중이 되어야 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에 대한 피해는 거의 같은데 다른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주민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판결로 해결하는 차원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법률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더 검토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형평도 기하고 불만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관련해 가지고 소음대책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면 그런 문제들도 사법적인 판단에 의하지 않고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하튼 그 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정미경 의원 법원에 대한 불신은 사실 한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요.

또한 집단소송으로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킨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수원 지역 주민 2만 3000명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상금 350억 원 중에서 52억 원을 수임료로 챙겼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들 세금으로 변호사만 좋은 일 시켜 주는 이 현실을 바로 직시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군 소음피해 배상으로 지급한 금액이 1435억 원, 올해는 3775억 원으로 2배나 늘었고 해마다 계속해서 지급되는 금액일 텐데 이렇게 지급하고도 피해를 입고 배상받지 못하는 주민들로부터 정부하고 법원이 원성을 듣는다면 이것은 국무총리께서 직접 나서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불합리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가지고 그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미경 의원 지난 4월 12일 농협 전산망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압니다.

○정미경 의원 미국 정보국 평가에 의하면 북한의 전문 해커들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최근에 디도스 등 일련의 사건으로 볼 때 북한의 사이버 관련된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사이버 테러로 우리의 기반시설을 직접 공격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우리의 대응책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국가 차원에서 그 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안보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안보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제도를 정비를 하고, 또 보안 담당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지금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2001년 때 신설되었고 2006년도에 당시 정부에서 10억 원 남북협력기금을 투입해서 북한 평양에 설립된 평양과학기술대학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지난 정부에서 50명의 우리 교수를 북에 파견해서 집중적으로 북한 학생들에게 IT 기술을 가르쳤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미경 의원 당시 많은 우리 IT 전문가들이 북한에 과학기술대를 세우고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었지만 그 당시 정부에서 이를 무시하고 지원하여 과학기술대학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공격 당한다고 가슴을 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당시 대학원 설립은 순수한 IT 기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원사업과 이번의 해킹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북한의 과학기술대학에서 전문적 해커들을 양성하여 왔다고 분석하고 있고, 그 분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일응 그런 쪽으로 추정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관한 확실한 인과관계가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드리기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미경 의원 법적인 증거를 찾으시는 것은 아니시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미경 의원 현재도 북한에 제공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원이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북한 전문 해커들의 공격에 맞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당연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중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대비하는 모든, 마스터플랜 수립이나 법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인력 강화 또 관련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 등 다각적인 지

원 정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아니, 저는 지금 구체적인 제안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고 제게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북한이 남북 비밀 접촉 내역 전격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의 대북 정책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바뀌지는 않았는데 방식이 달라진 겁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북 정책도 바뀌지 않았고 방식도 기본적으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정미경 의원 그러면 이 방식은 무엇인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비공개 접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남북 간의 대화를 위해서는 물론 공개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비공개적인 대화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때로는 비공개적인 방법도 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미경 의원 우리 정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해서 먼저 사과해야 하고 그다음에 대화해야 한다는 대북 원칙에 변함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미경 의원 북한 김정일 정권이 이렇게 뒤통수 때릴 줄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았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결과적으로 북한의 이번 무책임한 폭로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이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적절한 분명한 시인·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 내야 되겠다 이런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비공개 접촉에 나섰던 것입니다.

○정미경 의원 장관님, 제 질문은 '뒤통수 때릴 줄 알았습니까, 아니면 몰랐습니까?'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까지 그야말로 참 전대미문의 무차별적인, 무책임한 폭로 행위를 할지는 몰랐습니다.

○정미경 의원 몰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을 아주 서글프게 하고 계십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의 NLL 도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째인 지난 1999년 6월 15일 1차 연평해전이 발생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중이자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인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 발생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째인 2009년 11월 10일 대청해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맞습니다.

○정미경 의원 북한은 NLL에 대하여 1999년 9월에 처음으로 무효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멋대로 군사분계선을 선포하고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5도를 자기네 거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안함·연평도 포격 도발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전협정 당시 유엔군과 한국군은 우월한 해군력으로 북한의 해군을 괴멸시키고 한반도 이북의 서해안을 거의 점령하고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고 있습니다.

○정미경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십시오. 정전협정 당시 북한에게 한참 양보해서 당시 한국군과 유엔군이 점령했던 서해 섬들을 많이 내주었습니다. 유엔사령부가 제시했던 거지요. 북한의 김일성은 얼른 이것을 받아들였고, 남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할까 봐 걱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이 지나자 갑자기 뻔뻔스럽게 우리 땅을 넘보고 NLL의 무효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정미경 의원 그런데 이 황당함에 대해서 정부는 왜 설명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NLL은 DMZ의 연장선상에 있음으로써 한국의 거의 영토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수호되고 방호되어야 합니다.

○정미경 의원 장관님, 제 질문은 이 황당함에 대해서 왜 설명하지 않느냐고……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을 왜 설명하지 않았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문제는 기회가 되면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대략 6·25 이후에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는 단계부터 알고 있는 분들은 대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미경 의원 그래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6·25를……

○국방부장관 김관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미경 의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 이상입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들은 NLL 때문에 분쟁이 생긴다고 남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이면 정부는 국민들께 설명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옳습니다.

○정미경 의원 이제 한국사 교과서에 이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북한 김정일 정권의 실체를 제대로 알아야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무엇을 협력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정미경 의원 그래야 뒤통수도 맞지 않고 사기당하지 않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옳은 말씀입니다.

○정미경 의원 국방부에서 국민들께 홍보 좀 해주십시오.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사관학교에서 혹은 장병들에 대한 안보교육에도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장병 교육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우리 부모님들은 모든 꿈을 자식들에게 걸었습니다. 가난해도 너만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나오면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학비를 모아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교육의 힘이 대한민국 부흥에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려운 형편에서도 공부만 잘하면 출세할 수 있는 그 시대는 점점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과거에 대학에 갈 수 없었던 우수 인재들이 사관학교에 진학하여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 경험을 살려 사관학교를 다시 정비하여 인재를 양성하여 주십시오. 그 발전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정미경 의원 제가 볼 때는 장교 양성 시스템이 우리하고 다른 독일식보다는 우리하고 비슷한 미국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관학교 교장은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우리 상황을 감안해서 군의 상황을 잘 아는 사관학교 출신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교육내용은 군사교육도 중점을 두지만 다른 명문대에 못지않은 교육내용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사관학교는 현재 군의 정예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또 저명하고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고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해 가지고 이걸 선진화시킬 예정이고, 사관학교 교장은 현역 또는 예비역 장군 중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미경 의원 국방 개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억지 개혁안은 반대합니다. 예를 들어 부대 통합이나 군 병력의 축소로 인한 장군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개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장군의 숫자를 몇 명으로 줄인다는 식의 발상은 안 됩니다. 우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소요에 의해서 개혁을 목표, 개혁에 의한 목표를 정하고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군의 숫자는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걸 강조를 합니다.

○정미경 의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개혁을 위해서 개혁을 위한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정미경 의원 전작권 이양으로 인해서 비용 더 부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국민들께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정미경 의원 군부대 재배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전이 예상되는 군부대 이전 시기 등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우리 한국군 부대의 재배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군 부대의 재배치를 말씀하시는……

○정미경 의원 저희 한국군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한국군 부대 재배치 소요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지자체하고 협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정미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작년 일본을 방문해서 오자와 이치로 일본 민주당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배워 왔습니다. 또한 역사적 진실에 비추어 볼 때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 우리 집 막내 아이를 옆집에서 자기네 집 애라고 우긴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 마음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일본이 진정한 선진 강대국이 되려면 세계 시민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할 거고 이웃나라 국민의 마음도 잘 살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이 학교 교육을 통해 각인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기고 있다는 것과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바로 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보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바로 적이 있습니다. 남몰래 내려와서 어뢰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총구를 겨누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국민 모두가 한목소리를 내서 살인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김정일을 부를 때도 국방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천안함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과 그 세력들에 대하여 강력 규탄해야 한다고 하면 보수주의자, 아니 더 나아가서 꼴통보수라고 난리를 치면서 전쟁을 원하는 것이라고 매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진정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독도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함정을 일본이 몰래 폭침시킨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우겨대겠습니까?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원하므로 일본의 폭침을 일본의 소행이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기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저는 도대체 무엇이 보수인지, 무엇이 진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해서 나라 걱정으로 잠도 못 자고 울분을 토하면 보수주의자입니까? 꼴통보수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당연한 마음을 꼴통보수라고 조롱하면서, 전쟁을 원하는 몹쓸 자라고 선동하면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말장난 제발 그만합시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북한 김정일이 누구인지, 공산당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적으로부터 사기당하지도 않고 폭격 맞지도 않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적과 타협할 때와 목숨 걸고 싸워야 할 때가 언제인지 우리 아이들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의화 정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부의장 홍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주당 존경하는 서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서종표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금년 3월 7일 ‘국방개혁 기본계

획 11-30'을 발표하였습니다.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은 정부가 갈등의 소지가 다분하고 임기 내 실현도 가능하지 않은 개혁안을 정상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발표하여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독선적이며 소통 부재의 국정운영 방식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혁안에 대해서 각 군 간, 현역과 예비역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부추긴 이명박 정부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현역에게는 항명이라고, 예비역에게는 이기주의라며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방개혁안을 중심으로 국방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서종표 의원 앞서 모두발언에서 본 의원이 거론했지만 왜 매 정부마다 유독 국방부만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세계 어느 나라든지 환경이 변화하고 전략·전술이 변화하고 전쟁 양상이 바뀌게 되면 군의 근본을 바꿔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유효적절하게 개혁하지 않으면 그 군이 강군으로의 입지를 굳힐 수 없기 때문에 개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혁은 하나의 정치적 논리라기보다는 군사적 논리입니다. 스스로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서종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개혁'과 '개선'이라는 용어의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개혁과 개선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뭐 어떤 시스템이나 기구를 새롭게 고쳐 가지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생산적인 상태로 바꾼다는 의미에서는 개혁과 개선이 뭐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개혁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개선은 일상적으로 좀 낫게 만들어 가자라는 이런 표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서종표 의원 화면을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혁은 제도나 기구를 새롭게 뜯어고치는 것, 즉 프레임,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선은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또 나쁜 것을 더 좋게 만드는 것, 즉 틀 안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과 개선의 개념을 잘 알고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방부에서 발표한 73개의 개혁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화면에 제시된 "적극적 억제전략 개념구현"부터 "국방인력 및 인사관리 제도개선"이 이것이 개혁과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선과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저희가 총 7개 분야, 73개 과제를 제시한 것 중에는 일반 사업과제, 개선형 과제도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이 월남전 이후에 70년대 중반 대대적인 국방개혁을 하면서 총 6개 분야, 그때도 수십 개 과제를 같이 포함을 해서 개혁을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보다 고효율의 강한 군대를 만들고자 이러한 개혁과제를 패키지로 묶어 가지고 선정하다 보니 관련된 과제가 포함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종표 의원 제목이 개혁이었을 때 세부 내용이 개혁이 들어가는 것이지 개혁 자체가…… 개선과제를 개혁과제로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질문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서종표 의원 "상부지휘구조 개편"도 국방부에서 이렇게 주장한 것처럼 군정과 군령을 통합했을 경우에는 본 의원도 개혁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미흡한 분야를 보완할 경우에는 개선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에 보면 중장기 과제 다섯 개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개혁과제라고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경우에 따라서 그 안에 근본을 뜯어고치는 과제가 나오게 되면 개혁과제가 되는 것이고 현재 있는 사항의 일부를 개선해 가지고 나가자 할 것 같으면 개선과제가 되

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체를 포괄해 가지고 하나로 묶었을 적에 제목을 어떻게 붙이냐의 문제지 그 이해의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종표 의원 우리가 용어를 정해 놓고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공유했을 때 소통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용어를 각자 다르게 생각하면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일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국방부에서도 과감히 정리를 해서 진정하게 이것은, 이것만큼은 개혁이다 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 의원님 말씀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종표 의원 개혁을 많이 한다고 일 잘하는 것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오히려 더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음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국방위원회에 보고할 때에는 이 개혁과제가 여섯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변경되거나 추가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동안에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 중간에 나오는 민간인을 사관학교 교장으로 임명한다는 문제는 이해가 잘못된 이야기인데, 현역 또는 예비역입니다. 그것은 법을 개정해서 추가하려는 것이고 국군군수사·국군교육사 이 문제는 각 군 참모총장의 고유기능을 침해한다는 소지가 있다고 여러 가지 토의가 되어 가지고 그 문제는 당분간 유보를 시켰습니다.

○서종표 의원 결국 유보시키거나 백지화시켰다는 것은 당초부터 이 안이 심층 깊게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가 기본방향을 3월 7일 날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지침을 받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지난 한 3개월 동안 총 여덟 번에 걸친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 결과 나온 안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안은 수렴을 했고 또 옳다고 믿는 안은 그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서종표 의원 각 군 사관학교 교장에 예비역도 개방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재 같은 인사 스타일보다는 중장급을 인사할 적에 정책부서 우선으로 보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이 사관학교 교장으로 들어가지 않음을,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 왔기 때문에…… 또 단기간 보직이 불가피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인물을 장기간 보직시키기 위해서는 예비역을 복직시키거나 예비역을 그 자리에 앉혀서 현역 복장을 입히게 만들어 가지고 교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봤습니다.

○서종표 의원 그러면 사단장도 예비역을 현역으로 복귀시켜서 근무시키면 더 잘할 것 아닙니까? 과거에 사단장 했던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제출한 법에는 그 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종표 의원 미국을 너무…… 뭐 물론 참고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런 논리의 비약은 좀 많은 문제가 있고 현역에 대한……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희들 전투부대 지휘관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서종표 의원 현역에 대한 불신에서 이러한 안들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방부는 현 국방개혁안이 '국방개혁 2020'의 연장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습니다.

○서종표 의원 그렇다면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국방개혁 2020'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핵심은 합동군 체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국방개혁안은 군정·군령을 통합하는 내용으로 연장선상이 아니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장관님, 말씀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국방개혁 2020' 연장선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0년까지의 육해공군의 구조·배비 조정·전력증강 계획의 골간을 2020 작성할 당시의 분석 그대로, 거의 그 골간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지난해 발생했던 천안함 피폭, 연평도 포격도발 계기로 북한의 국지도발 또는 비대칭전력의 양상이 달라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

한 변화된 안보환경, 국방환경을 실용적인 형태로 보완해 가지고 '국방개혁 기본계획 11-30'으로 현재 발전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작권 전환 2015년을 앞두고 상부지휘구조 변경의 당위성을 우리가 공감을 해 놓고 또 그동안에 우리 군이 합동성을 강화하고 이제까지 분리되어 있던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시킴으로써 비로소 고효율의 상부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이것을 우선과제로 채택해 가지고 이번 국방개혁에 집어넣은 것이지 이게 추가적으로 들어갔다고 그래 가지고 기존 개혁인 2020을 무시하거나 무관하게 생각하지는 않는 겁니다.

○서종표 의원 그런 대답을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림을, 화면을 준비했지 않습니까?

화면을 다시 한번 띄울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작권 전환을 앞으로 4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작전중심의 전투체제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지난 20년 동안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상태에서 군 운용을 하다 보니 군이 행정화되고 비대화되고 어떤 사안에 민감하게 대응을 못 하고 하는 문제점이 노정돼서 이 기회에 이걸 고쳐야 되겠다 해 가지고 개혁과제에 집어넣게 된 겁니다.

○서종표 의원 그러니까 고쳐야 될…… 뭐 문제가 있어서 고치는 거야 고쳐야 되겠지요. 그러나 연장선상이 아니라 이거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 연장선상은 그동안에 '육군부대가 사단 규모가 총 얼마인데 군단이 총 몇 개인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 배비를 어떻게 고치겠다' 하는 것은 비밀사항입니다마는 이 계획은 그대로 살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서종표 의원 아니, 지휘구조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휘구조만큼은 별도로 집어넣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종표 의원 좋습니다. 이 연장선……

물론 세부 내용에는 포함될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휘구조 자체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휘구조는 2020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새로 변화되는 환경, 2015년을 앞두고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종표 의원 2020에서 다루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까 화면에서 제시한 대로 2020 안에 제시한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지금 화면에 띄워 준 겁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아시겠어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것을 '발전적으로 보완을 시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종표 의원 국방부는 현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예비역 장성들에게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랬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서종표 의원 이때 해·공군 예비역은 거의 참석하지 않았고 육군 예비역 위주로 설명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장관님은 해·공군 예비역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세계 어느 나라 군대건 합동성을 강화하거나 또는 군의 상부 지휘구조를 개혁을 할 적에는 항상 논란이 있어 왔고 또 반대 의견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3월 8일 날 이 내용을 발표를 하고 3월 20일경에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예비역 분들을 모셔 가지고 설명회를 했을 적에 그때 여러 가지의 논란이 나왔고 또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일부를 보완하고 설명 자료를 보완해 가지고, 정작 설명회를 할 적에는 "그 내용이 고쳐지지 않으면 안 가겠다." 이렇게 피력하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다 안 오신 것은 아니고 일부는 또 오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3차에 걸쳐서 설명회를 드렸고, 지난주에 했던 토론회에서는 해·공군도 다 다수 참석을 해 가지고 토론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서종표 의원 그러면 참석자들 중에서 개혁안에 대해서 대체로 어떤 의견이 제시됐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대부분은 국방부안에 공감하는 발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이렇게 되면 해·공군의 전통성이 사라진다."는 내용을 포함을 해 가지고 "주로 육군 위주의 개혁 아니겠느냐"라는 여기에 따른 불만 이야기인데 그것은 내용을 갖다가 잘 설명을 드린 것이, 이것은 결코 육군 위주의 개혁이 아니고 육군이 주로 개

혁이 되는 그런 개혁안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장군 숫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부 지휘구조가 개혁됨에 따라 가지고 약 30여 명 정도의 장군 직위가 줄게 되는데 주로 육군직입니다. 불만이 있으면 육군이 해야 되는데 해·공군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서 자꾸 자꾸 그런 주장만 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 줬고 또 이해를 한 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종표 의원 그렇다면 이번 설명회의 목적은 개혁안을 만들기 위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결정된 개혁안을 소개를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개혁이 순조롭게 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개혁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과거보다는 공감하는 인원이 훨씬 많아졌다 하는 것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종표 의원 아니, 개혁의, 이 설명의 목적이 좋은 개혁안을 만들기 위한 여론 수렴이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것은 문자 그대로 토론회입니다.

○서종표 의원 토론회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토론회, 토론회였어요. 반대 의견 이야기하고 찬성 의견 이야기하고 이런 토론회였습니다.

○서종표 의원 토론회를 완전히 거친 다음에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입법예고는 시간상의 문제인데, 근본을 놓고서는 입법예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이 뭐냐, 현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각 군 참모총장들에게 작전 지휘권을 준다, 하는 이 내용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입법예고를 해 놓고 소정의 절차를 거치게 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토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 영을 개선하거나 편성을 개선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종표 의원 그러면 앞으로 토론회에서 현 안보다 더 좋은 안이 제시될 경우에 현 개혁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참모총장에게 작전 지휘권을 준다’라는 내용은 포함이 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의 모든 문제가 작전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나온 걸로 봐서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정해 놓고 개혁안을 토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서종표 의원 그것은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정해 놓고 토의를 백 번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지 않으면 개혁이 아니지요.

○서종표 의원 아, 개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먼저 공감을 얻고……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 전에는……

○서종표 의원 ‘개혁을 해야 된다’ 했을 때 하는 것이지요. 그쪽 한쪽 생각만 ‘이것이 원칙이다’ 해 놓고 계속 밀고 나가겠다, 그리고 설명회를 듣겠다, 설명회를 듣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것은 해 주고 싶어도 안 해 주는 겁니다, 사람 감정을 살려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세계적으로……

○서종표 의원 나는 이 접근 방법이 대단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비민주적인 사고방식에서 독선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고방식이지 설령 그렇게 가고 싶더라도 그것은 좀 뒤로 숨겨 놓고 의견을 좀 잘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이끌게 하는 것이 리더십이지 ‘따르려면 따라라,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은……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게 한두 해 전에 나온 안이 아니고요. 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종표 의원 좋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난 40년 전부터 추진했던 안입니다.

○서종표 의원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군사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한번 일반 국민들이 이것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내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고 공장은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 사장이 지방 공장장 역할까지 하면서, 물론 이렇게 되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지요. 서울과 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과연 전쟁 시 통신시설, 도로, 건물 파괴 등 혼란스럽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

겠느냐, 이렇게 내가 우리 국민들에게 한번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국방부에서 장점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도 그런 부분을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통합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심층 깊은 토의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개혁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각 군 총장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양병 기능이 전투임무와 관련이 없는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각 군 본부에서 평시에 잘 훈련시키고 전투 준비를 잘 해서 전시에 작전부대들이 전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해외에서 작전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미국 참모총장들은 전투력을 만들어 가지고 양성을 해서 훈련을 시켜 놓고 해외에 투사를 시킵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통합군사령관이 이것을 사용하는 그야말로 그러한 양병과 용병이 나누어져 있는 체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동에서 서까지 240㎞밖에 안 됩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전구(戰區)작전을 지휘할 적에 단순화되고 통합된 지휘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합참 따로 있고 각 군 본부가 계룡대에 따로 있고 작전사령부 따로 있고 하는 이런 구조는 너무나 중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을 해 가지고 하나의 단일 지휘체계를 만들어서 지휘를 하는 것이 보다 간편해진다 하는 이런 논리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종표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장관님의 생각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다 이겁니다.

자, 전시에 각 군 총장이 전투 지휘를 하면서 동시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개전 초기에 인력 동원, 물자 동원, 장비 지원 등으로 해서 현재 간편부대를 완편부대로 전부 다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참모총장의 임무고, 또 전쟁 실시간에는 환자·파괴된 장비 후송, 손실병력 장비의 보충 또 후방지역에서 간부·병사들에 대한 교육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 전투력 복원을 위한 부대 창설, 참모총장이 해야 될 일이, 전시에 해야 될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것을 전투를 지휘하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군정과 군령을 부여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육군본부에서 하는 일이 낭비적이다, 행정적이다 또는…… 전시에 이와 같은 복잡한 임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 이렇다면 좋겠지요. 이런 문제들을 심층 깊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야전군을 없애면 군단에 전투근무 지원 기능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군단장이 군정·군령의 기능을 다 또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소야전군화(小野戰軍化)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일일이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한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차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시기 문제도 전작권이 환수되는 시기가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취약한 시기에…… 최소한 이러한 개혁이 정착되려면 5년～10년 정도가 걸리는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또 예산도 전혀 판단되지 않고,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국방부장관 김관진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서종표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국방부장관 김관진 각 군 참모총장의 양병 기능은 수백 년 전 전쟁을 할 적에도 후방지역에서 가신병 중의 하나, 예하 지휘관 중의 하나가 수행했던 업무이고, 참모총장이 그것을 직접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마치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 하면, 우리나라 현재 군제는 축구감독이 두 명 있는 것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한 명은 선수를 선발을 해 가지고 훈련만 시켜 놓고 또 한 명보고 경기를 치러라 하는 이러한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훈련한 대로 싸우고, 싸우는 방법대로 훈련시키고 하는 이런 일체화의 개념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기 문제는 2015년 전작권 전환과 기간을 연계해서 같이 가는 개념입니다. 금년 말까지 세부 편성안을 마련

해 가지고 내년도에 부분 개편을 하고 2014년도 말까지 작전사와 각 군 본부를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겁니다.

내년이 안보 취약기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위기관리부처, 작전대응부처는 그대로 존속한 상태에서 내년도 말부터 참모총장이 작전권을 가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전문가 집단이 들러붙어 가지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보다 작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을 저희가 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종표 의원 최종적으로는 시행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예산 문제·시설 문제, 이런 문제가…… 이것은 빨리 할 수 없거든요, 개혁은 빨리 할 수 있어도. 그래서 혼자만의 어떤 생각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많은 것을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잘 알겠습니다.

○서종표 의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방개혁은 군의 골격을 바꾸고 국가방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서 경험 많은 국방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깊은 연구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가 진심으로 군과 국가안보를 생각한다면 정권의 실적을 위해서 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는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군이 전문성을 살려서 스스로 옳은 길을 가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또한 '내 생각만이 옳다.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번 아니면 안 된다'는 무모한 자신감과 조급함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옛말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여럿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방개혁은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는 여럿이 멀리 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열린 마음으로 반대의 목소리도 겸허히 듣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수렴하여 원점에서 최선의 합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서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양주·동두천 출신의 존경하는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홍재형 부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동두천 출신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공정성이란 무엇입니까?

왜 국민들은 정의를,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공동체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이 땅에 미군이 주둔한 지 올해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퇴역 주한미군이 캠프 캐럴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증언을 한 이후 전국 곳곳의 미군 기지에 매립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그러나 엄연한 대한민국 땅이 죽음의 제초제인 고엽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는 기지 내 땅만 오염시킨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동두천시는 끔찍했던 윤금이 양 사건을 비롯한 미군 범죄와 기지촌이라는 오명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주시에서는 당시 중학생이던 효순·미선 양이 미군 탱크에 깔려 사망하여 반미 감정이 비등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군이 동두천에서 60대 할머니를 할아버지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제 미군이 2016년에는 동두천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20%를 미군에 의존하던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 살길이 막막한 실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지난 60년간 희생해 온 동두천시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동두천지원 특별법에 담긴 내용입니다.

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황식 총리님께서 취임하시고 동두천 특별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총리실에 우리 동두천 TF팀을 설치하여서 현안과제들을 검토·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동두천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현재 TF팀에서 검토 중인 열여덟 과제를 살펴보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 TF팀은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시간을 한정을 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성수 의원 우선 PT 화면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열여덟 과제 중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동두천에 제생병원의 건축 재개, 의대·간호대 신설 또 외국의 교육기관 설치 또 대기업 유치, 동두천 입주기업의 조세 감면 등이 주로 검토나 조정 대상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려면 동두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제 총리께서 각 부처와 협의해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동두천 특별법안의 취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유들을 근거로 해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미군 기지가, 물론 동두천이 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재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연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는 최선이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일단 차치하고라도, 동두천이 안고 있는 그러한 모든 문제들, 특히 동두천에서 요구하고 있는 18개의 현안과제 중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실익이 없거나 다른 대안이 필요한 경우는 동두천시하고 또 우리 TF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 협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도움이 가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 의원 PT 화면 좀 하나 더 띄워 주세요.

참 이 동두천이 전체 면적의 42%, 1100만 평이 미군 기지입니다. 그런데 용산의 82만 평, 현재 시가로 한 40조 원이 나갑니다. 또 1조 5000억을 지원해 줘서 용산공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평택 특별법, 18조라는 돈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동두천 시민의 20%가 미군 기지에 의해서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정부 대책이 너무 없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바로 이런 것들이 공정한 사회의 구현인가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을 다시 한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실질적으로 지금 호소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동두천 특별법 그것은 혹시 다른 문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신중히 고려를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된다, 우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PT 화면 다시 한번 봐 주세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지금 경기 북부의 군사보호지역, 또 대대급 이상의 부대, 미군 공여지를 표시한 지역입니다. 정말 한번 봐 주시렵니까, 총리님? 정말로 저런 시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경기 북부가……

대한민국 2만 불 시대에 울산이 1인당 GRDP가 45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경기 북부만 자르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최하위, 15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어제 총리님께서 최규성 의원과 LH공사의 진주 이전 문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전주의 형평성을 따질 때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보다 훨씬 못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지역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하나도 해 주는 게 없습니다.

누가, 어느 국민이 안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겠습니까? 경기 북부에는, 또 동두천에는 이러한 점을 꼭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 보상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경기 북부지역을 포함한 접경지역을 생태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무한 잠재력을 지닌 그런 지역으로 인식하고, 현재 접경권 초광역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만 가지고 동두천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시가 요구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공공기관·공기업·대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 기반시설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기지 매각자금을 일부 동두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매각 권한을 지자체의 장에게 이전을 해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을 염출할 수 있는 그런 다방면의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월 중에 동두천시를 직접 가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현지 실정과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 보고, 또 동두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수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그동안에 이 노고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이렇게 참아 왔던 것을 좀 보상을 해 주시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기관, 공기업, 대기업을 꼭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매각 권한을 우리 동두천시에게 줘서 정말 시에서 자금 염출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우선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김성수 의원 예.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기반시설 강화를 위해서 국도 3호선을 금년 내에 임시개통하고 또 복합화력발전소를 조기 준공하고 또 구리-포천 간에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는 등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성수 의원 정말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이걸 보고 있는데 아마 총리님의 그 말씀은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희망을 주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총리님 들어가시지요.

국방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구제역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해서 많은 군장병들이 방역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았고 구제역 퇴치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장관님, 구제역 바이러스가 적의 게릴라가 침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마 저는 가장 신속한 대응이 군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제역도 전쟁의 일환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국가재난 정도 수준으로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는 작전 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김성수 의원 그런데 참 가슴이 아픈 게 말이지요, 제가 농림수산위원이고 제 지역에, 우리 양주 동두천 지역에 구제역이 창궐을 해서 많은 소, 돼지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살처분 현장에 군 병력을 투입을 못 했습니다. 이유는 이 부모들이 거기에 투입하는 게 싫다고 해 가지고 투입을 못 했는데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아주 착잡했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소, 돼지를 살처분하는 데도 참여를 못 할 정도로 약한 군대면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작년 12월 중순 이후 제가 한 24, 25일경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별도 지시를 해 가지고 매몰처리 지역에 군 병력을 그때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 양주 지역은 초창기에 창궐했기 때문에 그 혜택을 나중에 창궐한 지역이 많이 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구제역 이런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장 어느 곳에도 군 병력을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글쎄, 저는 비상상황 발생시에 군의 화생방부대,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이것도 엄연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 군인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을 걸 우려해서 군 병력을 투입을 안 했다면 이건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을 주는 일이다, 앞으로 개선할 생각이란 말이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 작년 말부터 이미 투입을 했었습니다.

○김성수 의원 앞으로도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동두천 관내에 미군 공여지가 많은 것 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성수 의원 1100만 평 정도가 있는데 350만 평이 부대 영내고 750만 평이 철조망 바깥에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성수 의원 그런데 이 토지는 미군이 주둔한 60년 동안 한 90%가 사용된 적이 없는 토지입니다. 저희 동두천에 미군기지가 현재 2016년에 나가기로 했는데 2016년에 토양오염 치유하고 이거 저거 하려면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에 그 관외에 있는, 부대 바깥에 있는 그 공여지를 반환받아서 동두천 어떤 발전의 토대로 쓰려고 하는데, 제가 전 미8군 사령관인 샤프 사령관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맨 처음에 모르시더라고. '부대 안에만 공여지인지 알았지 바깥에는 몰랐다. 그런데 그건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국방부랑 상의해서 반환을 해 주겠다'라는 답변도 받았고 서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국방부가 여기에 대한 미적미적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그 내용은 실무자로부터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미사용 주한 미군기지가 있다면 한미 합동조사를 통해 가지고 확인될 경우에 SOFA 협정에 따라서 반환이 가능합니다. 행정적으로 이것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저 PT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부대 바깥의, 안의 걸 표시한 겁니다. 동두천시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장관님, 저게 지금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미사용 공여지에 대해서 미8군 당국에서도 반환해 주겠다니까 한국 국방부만 협조를 해 준다면 금년 내라도 반환을 받아서 2016년 이전에 동두천, 우리 시가 살 길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겠습니다. 미 측도 동의한다면 합동위원회라는 걸 편성을 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SOFA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김성수 의원 저 PT 화면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한수 이북의 경기도의 지뢰매설 현황입니다. 경기도에 1만 3864개의 지뢰 중에 991개, 한 9% 정도가 유실된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PT 화면 봐 주세요. 저거 한번 봐 주시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지뢰지대', 옛날에 지뢰가 묻혀 있던 지역이다…… 우리 지역에 저런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뢰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뢰가 없다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 사유재산을 허가도 못 받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저도 전방지역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6·25 당시에 지뢰를 매설한 이후에 사실이, 잘 입증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다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안전판을 걸어 놓고 있는 것을 과거부터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지난 98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총 1700여 발의 지뢰를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수거한 지뢰가 뭐 추산입니다만 약 3000여 발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전후방 구분해 가지고 유실지뢰 발생 가능한 지역을 놓고서 탐지하고 또 수거활동을 하고, 마찬가지로 미확인 지뢰지대 저 내용도 계속적으로 탐지활동을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아니, 지금 우리 양주나 이 후방지역은요, 미군 통신기지에 지뢰를 매설했는데 장마 때 유실이 된 겁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유실……

○김성수 의원 그런데 몇 개를 묻었는지를 몰라서 수거를 했는데도 저런 표, '과거 지뢰지대'라고 표시를 해 놓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걸 그러면 군이 됐든 민간인이 됐든 지뢰가 없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과거 지뢰지대로 놔둬서 국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할 겁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런 문제는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별도로 제가 TF를 편성을 해 가지고 그 일대를 확인한 후에 조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장관님, 먼저 조금 전에 우리 총리에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김태영 국

방부장관 때 주한미군이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때문에 우리 동두천 특별법을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동두천 소재의 미군기지 매각대금을 산정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약 2000억 원 정도로 저의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성수 의원 전체 매각대금이 2000억밖에 안 돼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현행 용도로 하면 6745억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수 의원 화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PT 화면.

주한미군 이전 시에 지금 평택의 자금이 매각대금, 뭐 다른 회계, 기금으로부터 전입금, 회계차입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쓰는 돈들이요. 보셨어요? 아래쪽에, 아래쪽에.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참, 저걸 보면서…… 이게 용산 미군기지 매각대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용산 미군기지 자체는 공원용지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수 의원 나머지……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 나머지……

○김성수 의원 나머지가 지금, 잘 들으세요. 평택에 미군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게 국비가 한 4조가 됩니다.

그런데 용산기지 하나만 지금 5만 7000평이 매각할 수 있는 땅입니다. 5만 7000평 매각대금이 지금 3조 5000억으로 추산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용산기지가 81만 평이면 40조예요.

그런데 그 2700억 때문에 60년 동안 지켜온 동두천시에 10원도 안 주고 떠난다, 주무장관으로서 좀…… 국방도 서비스인데 고려해 볼 만한 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까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공감을 합니다. 동두천 시민들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동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동두천시 지원에 대해서 총리실에서 검토한 대로 저희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주한미군 주둔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에 수많은 이름 모를 미군들이 한국에서 전사를 했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우리 동두천에는 미2사단 주둔 관계로 해서, 그 자리에 7사단도 근무했지만 동두천을 거쳐 간 미군들이 한 70만 명 됩니다.

본 의원이 동두천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되었습니다. 나는 한국이 앞으로도 한미 친선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귀영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한미 친선을 강화하는 게 저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지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현재 보훈처에서 그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보훈처하고 협의해서, 또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서 더 숫자를 늘리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원 우리 동두천의 미군기지를 이용해서 그런 귀영 프로그램을 한다면 돈도 별로 안 들고 우리 미군들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남겨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김성수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공자께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중요한 것이 첫째 먹는 것이고, 둘째는 나라를 지키는 일이요, 셋째는 백성들에게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60년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가를 위해서, 주한미군을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시를 국가가 외면한다면 국민들은 국가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선진당의 존경하는 박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영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지난 5월 20일에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영 의원 그날 대한민국 언론들은 전부 오보를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하루 종일 오보를 했습니다. 김정은 단독 방중설을 보도했는데, 총리께서는 김정일이 방중했다는 사실을 언제 아셨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저도 상당 시간 동안 김정은이 방중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가 언론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잡혀질 때 알았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돼서 언론이 정정보도 할 때 처음 아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습니다.

○박선영 의원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가 대북 정보 분석에 예산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면 표 한번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대북 정보 예산이 무려 112억 원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예산 날치기 때 다른 예산은 다 날아갔어도 이 대북 정보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112억을 어디다 쓰고 김정일이 방중하는 걸 하루 종일 온 언론이 오보를 하게 만드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국가정보원 예산은 비공개기 때문에 그 예산은 빠지고 지금 통일부 예산만 123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 정보 가운데 핵심 중의 핵심은 김정일과 김정은의 행동반경 아니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당연한 지적이신데 다만 여러 가지, 그야말로 정보를 분석을 해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다소 그걸 판단을 서투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시면 좋지만…… 다만 저로서는 더 문제점은 오히려 정확하지 않으면 차라리 공표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텐데 그야말로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경유론가 그것이 외부로 새어 나갔다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정보 판단 능력을 기르도록 이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최초의 정보는 청와대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 경위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청와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도중에 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도 기자들은 계속해서 김정은 단독 방중설을 보도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는 사표를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 제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선영 의원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리고 주중대사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시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세 번째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1년 반을 다 채우지 못하고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1년 반, 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임장 받고 한 번씩 인사하는 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더구나 중국은 대륙입니다. 중국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꽌시 사회라는 걸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사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한 나라의 대사는 그 주재국에서 상당 기간 동안 체류를 해야 여러 가지 인맥도 형성이 되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이 그러한, 지금 지적하시는 '중국이 무시당한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도록 지금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중국과 깊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외교관으로 파견을 하고 보내고 있고 또 중국에서 근무하고 했던 사람들이 다 또 그곳을 떠나더라도 중용이 되는 그런 인사를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더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선영 의원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건 아마 아실 겁니다.

김정은 방중설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녁에 언론

을 보고서야 아셨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북경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언제 아셨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건 언론에 공표되기 직전에 알았습니다.

○박선영 의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헌법상 총리께서는 행정부를 통할할 권한을 가지고 계신, 헌법상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공표되기 직전에 아셨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문제를……

그렇습니다. 대북 접촉 관계라든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총리가 일일이 확인하거나 알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리가 관여를 하고 또 미리 보고를 받아야 할, 필요할 때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때그때 사정이 좀 다릅니다. 다른데, 이번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는 언론에서 발표하기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선영 의원 직전에?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영 의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보고받으신 내용은요?

○국무총리 김황식 북한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언론에 공표를 한,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박선영 의원 북한이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에 가장 근접한 내용의 사과와 유사한 발언을 해 주기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보고도 들으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내용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고요. 지금 박 의원님 언론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통해서 그 사실은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만 그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어제 저녁부터 그 언론 보도가 나갔는데 총리께서는 확인도 못 하셨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 사실관계는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명박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표 보시면 '연연하지 않겠다' '대가 지불하지 않겠다' '사과 표시가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입니다.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다음 표 한번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대통령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17대 국회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무리하게 밀실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전시켰을 때 한나라당 의원님들, 지금 다 한나라당의 지도부 의원님들이십니다. 제가 성함은 가렸습니다만, 저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권만 잡고 나면 똑같이 그렇게 남북정상회담에 목을 매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통일부장관이 그 점에 대해서 여러 번 여기서 발언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러한 비밀접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을 풀고 진정한 남북대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고, 다만 북한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또 시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는 그런 태도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접촉 내지 대화의 노력은 계속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의 접촉도 결국은 남북대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지 그것이 직접적으로 정상회담을 이벤트성으로 치르기 위한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박선영 의원 그러니까 '사과를 받기 위해서 만났다'라는 통일부장관의 어제와 오늘 연이은 답변하고 같은 내용의 답변을 하시는데……

○국무총리 김황식 그렇습니다.

○박선영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2009년 10월에 있었던 싱가포르에서의 남북 접촉, 11월에 개성에서 있었던 것, 그다음에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북경에서의 남북 접촉, 이것도 전부 사과를 받기 위해서 있었던 건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천안함 그 이전에는, 이러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요. 그때도 남북관계가 나름대로 경색되어 있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그때는 제일 과제였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비핵화, 그리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에는 그 사건에 대한 사죄, 재발 방지, 이런 것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남북관계의 경색이 되어 있는 원인과 그리고 우리가 원칙을 세워

서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태도로 나오도록 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결국은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한 그런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접촉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그 전에는 경색을 풀기 위해서고 그 이후에 나머지, 12월에 베트남에서 만나고 올 3월에 말레이시아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된 5월에 북경에서 만난 것은 사과를 위해서 만났다라고 하는 걸 어느 국민이 그것을 곧이듣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3년 내내 이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에 목을 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한은요 북한하고 비밀 접촉하면서 그 비밀이 지켜지리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오산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에 북한이 저렇게 폭로한 것은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 MB 정권의 잘못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미련 이것을 없애고 수렁에 빠진 우리 MB 정부에 제대로 된 각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잘된 일이다, 오히려 우리 MB 정부를 수렁에서 꺼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상생공영이고 비핵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정상회담이라든지 남북대화를 종전과 같이 어떠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가 아니고 진정으로 품격 있는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러한 원칙을 세우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접촉들이 결코 정상회담을 어떻게든지 이루기 위한 그런 접촉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선영 의원 총리께서는 대가 지불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이번에 봉투가 건네진 것은 1만 불이 건네졌고 그것은 교통비와 호텔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봉투여도 그것이 대가성이냐 아니면 실비냐를 따지는 데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로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결과도 도출할 수 없는 무의미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는 미련을 버려 달라고 대통령에게 직언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대통령의 생각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지 그야말로 이벤트성으로 한다든지 정략적인 이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정상회담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일관된 입장이고, 또 지금까지의 접촉도 그 원칙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남북정상과 관련된 접촉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리고 총리께서는 요즘 고엽제가 무척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고엽제가 언제, 얼마만큼, 어떻게 들어왔고, 왜 들어왔고 그 처리 과정은 어땠고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캠프 캐럴 사태 이후에 총리실에 총리실 국무차장을 실장으로 한 모든 상황들이 체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하고 다른 그런 이런 저런 의혹들이라든지 고엽제의 살포 양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아울러서 차제에 그런 문제도 전부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고엽제만이 아니라 미군기지가 있었던 곳에서의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표 함께 다시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빨간 표시가 된 것은 반환된 미군기지고요. 초록 표시는 현재도 있는 미군기지이고 이 표시는 핵물질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서울,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경기도, 경상도 할 것 없이 온갖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혈맹으로 다시 태어나고 마음으로부터 이어질 수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려면, 더욱이 미군이 주둔한 지 올해로 60년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SOFA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SOFA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관 출신이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원상회복이나 보상의무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부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연방환경법보다 주환경법, 바이에른주 같은 경우에는 주환경법이 더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연방환경법과 주환경법을 모두 준수해야 하고요. 환경조사나 정화 비용 등 모든 비용 지불을 미국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환경 분야의 예산을 지불하는 최다 국가가 바로 독일입니다. 미국이 환경 때문에 지불하는 돈을 독일에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나라 일본 보실까요?

일본은 비록 원상회복이나 보상의무는 없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환경관리기준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의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미·일 양국의 환경법 중에서 미국 것이 더 강한 조항은 미국 것을 쓰고, 일본 것이 더 강한 조항은 일본 것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아까 우리 미군기지 반환했지요. 미군기지 반환하고 3년이 지나서까지 A/S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반환과 동시에 모든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자체별로 미국하고 또 다시 관리규정을 맺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SOFA 규정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OFA의 환경 관련 규정이 명문화된 것이 2001년입니다. 2001년이고, 그전에 일본하고 미·일 SOFA에는 환경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SOFA 개정을 해서 환경보호규정을 뒀는데 그 뒤의 진행에 따라서 계속 그런 미비점을 보완하고, 2009년까지 공동환경영향평가절차서를 새롭게 한다든지 계속해서 강화를 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도 우리의 환경규정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들어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독일의 경우는 우리하고 조금 다른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독일의 경우에는 소위 미군시설, 주둔군이 물러날 때에 그 시설들을 전부 독일에서 매수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매수하고, 우리의 경우는 미군에서 그대로 놔두고 나갑니다.

말하자면 그 시설들을 모두 저희가 무상으로 양수를 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가 관계에서 미국·독일과 한국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로 인해서 그쪽에서는 환경 쪽에서 더 미군이 책임을 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만치 못한 이런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잔존시설을 어느 쪽에서 대가를 지불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차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SOFA의 관련 규정들이 미흡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하는 것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개정하는 작업·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총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이 많이 섭섭합니다. 독일하고 일본은 패전국이어서 미국이 들어갔고요,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지요.

더구나 총리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춘천에 핵사고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핵사고가 언제입니까?

○박선영 의원 1972년, 저는 개인적으로 춘천여고를 나왔고요, 그 당시에 춘천여고 2학년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때 핵미사일의 탄두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춘천의 남쪽으로 20㎞ 떨어진 곳에 묻은 것으로 댈러스 스넬이라고 하는 베테랑이 며칠 전에 공표를 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이라는 도시 잘 아실 겁니다.

호수가 있고 산이 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우리나라의 전국의 암 발생률과 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순위에서 평균보다 최고 23명까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표 한번 봐 주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요?

제가 여학교 2학년일 때 춘천에서는 미사일 사고가 났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어머니들은 미군기지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핵물질이 분명히 춘천에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춘천에서는 세슘 137과 134가 검

출이 됐습니다. 세슘은 핵분열이 있을 때만 방출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이런 통계자료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근거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여하튼 인과관계라든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박선영 의원 댈러스 스넬이라는 베테랑이 양심선언을 하고 폭로를 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대법원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09년도에 춘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실태 결과를 공개하라고 대법원에서 환경부에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잘……

○박선영 의원 바로 SOFA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SOFA 규정에 따르면 정보공유 접근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요구를 해도 미군이 승인을 하지 않으면 정보공개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양국이 동의를 해야 공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춘천에서 핵미사일의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사실이고, 저렇게 춘천시민의 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데보다 23명씩이나 많고, 그리고 그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데도 안 한다면 SOFA는 분명히 개정되어야 하고, 그 핵 사고에 대해서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독도에 개가 살고 있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둔 주민이 개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선영 의원 아닙니다.

독도를 영어로 어떻게 표기하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리앙쿠르로 이렇게……

○박선영 의원 독도를 리앙쿠르라고 하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미국의 지리정보에 그렇게 리앙쿠르……

○박선영 의원 (패널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을 보시고, 총리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미 지명위원회에 들어가셔서 클릭을 하면요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아직도 우리 독도를 리앙쿠르 록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 리앙쿠르라는 것이 어떤 특수한 지명이 아니고 그냥 보통명사 아닙니까?

○박선영 의원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이것 보세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리앙쿠르 록스라고 검색을 했을 경우에요, 한번 보세요.

리앙쿠르 록스는 승인된 거고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는 완전히 하나입니다. 다케시마지만 우리는 'Dok' 독도, 그다음에 'Dog' 독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Dok' 독도로 검색을 하게 되면요, 한번 보세요. 이 독도가 어디에 있는 것으로 나오느냐 하면 전라남도에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북위와 경·위도도 잘못되게 나와 있습니다. 131도에 있는데 126도에 있다고 나옵니다.

이것 우리 외교부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리실에 독도위원회 구성되어 있으시지요? 그 독도위원회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우리 영토고권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28개 사업인가를 세워 가지고 그것을 지금 착실히 진행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영 의원 차라리 우리 국회한테 독도 업무 넘겨주십시오. 어떻게 저런 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독도에 'Dog'로 쓰면요, 영어 하시는 분들은 그게 욕하는 거라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전력을 극대화해서 국가안보를 확실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선영 의원 그 전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국무총리 김황식 전력은 현대전은 국가총력전이기 때문에 군인은 물론 국민 모두의 힘에 의해

서……

○박선영 의원 그렇지요, 그 군인은 건강해야 되겠지요.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은 군대를 안 간다고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민의 아들만 가는 그 군대에 가서 병이 들면 죽는다고 사람들은 자조적으로 얘기합니다.

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저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나타난 사고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습니까? 국방의학원 설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국무총리 김황식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물론 박 의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군 의료 체계를 개선을 해서 우리의 젊은 병사들이 결코 의료적인 혜택이 부족해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기본 전제인데 다만 국방의학원이 가장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더군다나 최근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지금 TF를 구성을 해 가지고 군 의료 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하는 모든 가능한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금년 10월까지 결론을 낼 작정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 중의 하나가 국방의학원도 포함될 것입니다.

○박선영 의원 현명한 결론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석해균 선장이 다발성 총상을 입었는데 총을 맞은 석 선장이 어떻게 민간병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모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나라들의 최고의 병원은 군병원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우리 아들들이 마음놓고 군대에 갈 수 있도록 국방의학원 제대로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 좀 같이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 동영상은 제가 2월 25일에 일본 의회에 가서 일본 의원들을 상대로 사할린 문제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하면서 틀었던 영상을 2분 정도로 제가 편집한 겁니다.

제가 자막을 같이 넣어 놓았기 때문에, 일본에서 틀었던 대로 자막을 넣어 놓았으니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할린으로 끌려가는 뱃속입니다. 소련이 가지고 있던 영상을 제가 러시아로부터 받았습니다. 해방이 됐지만 강제징용됐던 사할린 한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들이 강제노동을 당했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패전이 됐습니다. 일본군들이 무장해제하고 있습니다.

패전 후에 일본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 정부에 의해서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좀 틀어 주세요. 마이크는 끄더라도 저거는 좀 틀어 주세요.

의장님, 마이크는 끄더라도 저 영상은 좀 틀어 주십시오.

(「틀어 줘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는 끄더라도 영상은 좀 틀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렇게 일본 사람들은 일본 배를 타고 일본 정부에 의해서 갔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조국이 배를 보내 줄 줄 알고 전부 세간살이를 가지고 코르사코프 항구에 가서 몇 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 곳에서 한국 우리 선조들은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리고 미쳐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련하고 냉전시대가 되면서 사할린 한인들은 조국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조국은 지금도 없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저런 곳에서 사할린 한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할린포럼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찍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그분들은 한국이 자기들을 찾아 줄 줄 알고 저렇게 죽어서라도 한글로 묘비명을 써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것마저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예.

○박선영 의원 나라가 힘이 없어서 나라를 뺏겼을 때는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다른 나라를 도와줄 정도로 경제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사할린 한인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사할린 공동묘지에 한번 가 보십시오. 독도도 한번 방문해 주시고 사할린에도 가셔서 그분들의 사는 모습을 한 번만 눈으로 봐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조국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도 보호받을 국가가 있다는 것을 총리께서 조금 보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그분들을 위한 위령비라도 세워 주십시오. 그분들의 묘지를 전수조사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경로로 사할린까지 강제 징용되어 갔는지를 파헤쳐 주십시오.

언제까지 일본의 사과만 기다릴 것입니까?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분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이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박선영 의원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존경하는 윤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현 의원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남구을 출신의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1960년대 말 비무장지대에서 있었던 고엽제 살포작전의 구체적인 시행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 시험적용이 1967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습니다. 이는 고엽제 살포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한 테스트 작업으로 제21사단이 주둔하고 있던 강원도 양구 대암산과 백석산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살포된 고엽제가 에이전트 오렌지 55갤런, 모뉴론이 5만 1000파운드였습니다. 당시 나타난 효과는 이랬습니다. 1년생 초목이 15일 만에 고사했고 다년생 잡목은 잎과 줄기만 고사했으며 토양은 흑적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시험 이후에 한미 양국 군은 이듬해인 1968년 3월에 한미 관계관 준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결과는 미 군사고문단이 기술적 지원 및 감독을 담당하고 한국군이 제초제 살포를 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20일 미국으로부터 각종 제초장비와 물자가 도착해서 분배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도입된 제초제가 에이전트 오렌지, 에이전트 블루, 모뉴론 세 종류였습니다.

장관님, 당시 미 측이 이를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그때 군원 시대였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 당시 미 측으로부터 획득한 고엽제의 양이 각 종류별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자료에 의하면 68년도에 제공된 것이 에이전트 오렌지 370dℓ, 에이전트 블루 625dℓ, 모뉴론 7800dℓ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면 당시에 고엽제 살포 결정을 한국 측이 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국 측이 한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때 당시는 철책이 없었고 목책 시대이고 적들의 침투가 빈번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불모지 작업이라는 개념하에서 전방 철책지역 또는 적이 은거할 만한 지역의 풀을 깎아 내고 파헤치는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쉽게 하기 위해서 고엽제가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엽제를 68년도, 69년도에 살포한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 살포 결정은 한국이 내렸습니까, 미국이 내렸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한국군 고유 권한입니다. 한국이 내렸을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한국이 내렸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윤상현 의원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11월 23일 워싱턴에서 제3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조성태 국방장관이 윌리엄 코헨 미 국방장관에게 ‘당시 미국의 권유가 있었지만 고엽

제 살포 결정은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의 결정이었다, 한국군의 결정이었다는 게 한국 국방부의 입장이다'라는 비문을 알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한국 측의 요청에 의해서 살포를 했다면 결과적으로 한측이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했고 당시에 미국의 권유나 권장이나 제안이 있더라도 이는 중요한 군 작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당시 한국군 작전통제권은 유엔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규명하고 고엽제 매립과 관련해서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밝히기 위해서는 미측 스스로도 사실 규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우리도 미측에 이를 당당히 요구해야 하고요.

그런 조치와 요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고엽제에 포함되어 있는 다이옥신이 유해하다는 것이 80년대 들어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그에 대한 어떠한 유해성이나 그에 대한 어떤 보상 요구나 하는 것이 없었던 시절로 생각을 합니다.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이후에 우리 한국 정부 측에서 고엽제 환자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측에 대해서 지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는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러면 DMZ의 고엽제 살포작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엽제 살포작전 실시기간이요, 68년 4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리고 69년 5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1999년 발표에서 68년의 작전기간을 5월 30일까지라고 했습니다.

장관님, 5월 말이 아니라 10월 31일까지가 맞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좀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아마 10월 31일까지가 맞을 것입니다.

69년 여름 작전 이후에 DMZ 고엽제 살포가 중단된 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왜냐하면 70년대 초까지 뿌려졌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기록상으로는 69년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기록상으로 69년 7월 31일까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윤상현 의원 그런데 제가 장관님께 이 문제를 여쭙는 것은 고엽제 피해자 보상 대상 기간이요, 우리 한국군은 70년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미군은 피해 보상 대상 기간이 71년 8월 31일까지, 1년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에도 고엽제가 뿌려지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자료상에는 69년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하여튼 이 문제는 고엽제 피해 보상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70년대 초에도 살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장관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보이셔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당시 고엽제 살포량이 68년도에 보니까 에이전트 오렌지가 2만 350갤런, 에이전트 블루가 3만 4375갤런, 모뉴론이 39만 7800파운드였고요. 69년도에는 그 양이 대폭 감소해서 에이전트 오렌지가 사용되지 않았고 에이전트 블루가 3905갤런, 모뉴론이 6만 7677파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99년 이를 발표하면서 이 중 모뉴론의 단위인 드럼을 파운드로 잘못 읽어서 원래 살포량보다 51배나 적은 양으로 발표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저희들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드럼을 파운드로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것이 국방부의 실수라고 표현이 된 모양인데, 장관님 견해도 실수라고 보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 고엽제가 살포된 지역은 최전

방 9개 사단에 소속된 93개 대대가 관할하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이었습니다. 추정되는 살포 면적은 약 6840ha, 2069만 평입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전 지역입니다.

○윤상현 의원 이때 사용하고 남은 고엽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육군본부에서 파악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처리됐다고 합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자료를 찾아 봤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됐다 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살포가 다 끝나서 그냥 그 상태로 놔둔 것인지, 일부 잔여량이 있는 것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그 당시의 작전 상황과 작전일지를 다 가지고 계시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좀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대개 화학부대에서 분배를 해 주고 대대급에서 살포를 했기 때문에, 약 40년 전 일입니다. 대대급의 일지가 과연 기록으로 남아 있을지 여부는 좀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왜냐하면……

장관님, 2000년도 2월 9일 날 당시 길형보 육군참모총장이 조성태 국방장관에게 고엽제 살포 확인 결과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제가 보니까 담당 국방부 과장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2000년도 2월 9일 길형보 육군참모총장이 조성태 국방장관에게 보고한 고엽제 살포 확인 결과라는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에 고엽제를 살포한 부대와 작전일지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엽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당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 작전과에서는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렇다면 좀 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당시 살포작전에 투입된 부대들이 이렇습니다. 6군단 예하 2개 대대, 5군단 예하 5개 대대, 3군단 예하 1개 대대, 2군단 예하 1개 중대 그리고 미 1군단 예하 1개 대대 등 모두 9개 대대 및 1개 중대, 추정 인원 5700명, 이렇게 투입됐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부대들의 작전 상황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용하고 남은 고엽제 잔량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다 어떻게 처리됐는지 조사해서 정확하게 발표해 주시지요.

장관님, 가능하겠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아마 기록이 있으면 잔량이 남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윤상현 의원 당시 작전에 투입된 부대들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1군 제56화학중대가 1개 소대씩 나눠져서 각각 6군단, 5군단, 3군단에 배속돼 운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군사령부 직할부대인 화학부대가 왜 이 작전에 배치됐겠습니까? 보통 제초제 뿌리자고 화학부대를 동원합니까? 화학부대는 제독(除毒) 임무가 핵심입니다. 즉 당시 병사들에게는 그냥 제초제라고만 알려졌지만 지휘부에서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고엽제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추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이게 대량으로 살포될 경우에는 또 사용요령이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소 전문적인 유사한 분야가 화학부대이기 때문에 화학부대에게 임무를 줘 가지고 어떤 기술적 차원에서 지도를 하거나 또는 일반 부대에게 이것을 살포할 적에 요령을 감독을 하거나 이런 경우로 사용되지 않았느냐, 이것은 추정입니다.

○윤상현 의원 추정인데요, 당시 1군 작전처장이었던 이재전 준장—당시 68년, 69년도 근무했습니다—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독성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고엽제에 대해서 독성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어 가지고 아예 철모에다가 모뉴론을 넣고서 그것을 분말가루로 뿌렸고요, 심지어 어떤 군인은 그 분말가루를 물에다 타 먹었답니다. 이게 현실이었답니다.

그리고 장관님, 둘째는 미 2사단 지역에도 국군 95연대와 27연대 병력 일부가 투입됐다는 사실입니다. 즉 동부전선뿐 아니라 서부전선에서도 고엽제 살포가 이루어졌다, 결국 GOP 사단 전체에서 고엽제 살포가 이루어졌다, 이 사실은 뭐

맞는 얘기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그것은 뭐 당연합니다. 특정 지역보다는 전 전선에 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제초에 대한 요구는 아마 전 전선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윤상현 의원 장관님,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에서 다이옥신 검사가 빠져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윤상현 의원 그것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것을 사실은 당시에 SOFA 규정에 넣을 적에 다른 오염물질은 다 넣고 다이옥신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빨리 넣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천에 있는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에 대한 환경조사는 언제 시작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이것도 아직까지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미군들하고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왜냐하면 그 안에 위치한 DRMO라고 있지요? 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 군수품재활용유통처리소에서 그간 각종 위험물질들을 처리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파문의 또 핵심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이 캠프 마켓이 가지고 있는 그런 폭발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이것은 현재 국방부가 연합사하고 이에 관련 환경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협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할을 앞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최근에 재미 언론인 안치용 씨가 미 육군공병단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주한미군이 1989년도에 캠프 마켓에서 독성물질인 폴리염화비페닐 448㎖을 한국 처리업자를 통해 처리했다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인천 주민 분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정부라면 미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하는 게 상식이 아닌가 합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아무쪼록 기지 내부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해서 기지 안팎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조속히 시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김관진 알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환경조사계획을 언제까지 발표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김관진 미측과 일단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후에 날짜를 잡아 가지고 이것이 합의가 되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님 나와 주시지요.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을 초대했는데 그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그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핵안보정상회의 같은 데에 정말로 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 아니, 2000년 김대중 정부 때도 답방을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오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장관님께서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 비밀 접촉의 핵심이다 말씀하셨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윤상현 의원 사과를 받아내는데 왜 청와대·통일부·국정원 세 군데에서 사람을 모아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마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윤상현 의원 아니,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통일부면 통일부, 국정원이면 국정원, 한 부서의 고위급 레벨에서 가는 게 정도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정도다 아니다 이것은 없고요. 비공개 접촉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윤상현 의원 제가 보기에 시인과 사과를 받아내는 게 핵심이라면 고위급 레벨에서 한 부서가 가면 됩니다. 주러 가는 게 핵심이라서 뭘 줄지 의논이 필요해서 관련 부에서 모아서 간 것 아닌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뭘 주기 위해서 갔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또 북

측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애걸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공개 접촉이 이런 식으로 결국 북한이 정말로 무책임한 폭로성의 어떤 행태를 보임으로서 참 난관이 되었습니다마는 남북대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미국도 남북대화 해라, 그것 우선이다, 북한이 지금까지 죽 해 왔던 전략·전술이 뭡니까? 우리 정부를 우회해서 직접…… 예를 들면 미국과 거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북측에 훨씬 유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성된 국제적 환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미국도 남북대화를 먼저 하고 와라, 그리고 중국도 비핵화회담 자체도 남북이 먼저 회담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북한이 하고 그리고 6자로 가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그렇게 권유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북한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1월 초부터 우리에게 대화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화 공세로 규정을 하고, 그게 뭡니까? 이것은 그냥 대화만을 위한 대화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그런 대화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우리는 일관되게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대화의 핵심은 천안함·연평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인·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 이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북측이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비공개 접촉이 이루어진 것이고 당연히 그 내용의 핵심은 천안함, 연평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관한 논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우리가 무슨 정상회담을 애걸복걸하기 위해서 만났다 이렇게 각색하고 윤색하는 것은 정말로 본질과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 정상회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희 정부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지금까지 죽 그러한 태도로서 국민에게 말씀을 올렸는데 어느 한 순간에 돌아서서 천안함, 연평도 사과 제대로 받지도 않고 이번에 폭로한 것처럼 남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북쪽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그런 저잣거리에서나 될 만한 얘기를 가지고서 한다고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납 안 됩니다. 그것을 정부가 모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비공개 접촉의 실상은 우리가 무슨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국제적 환경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북쪽에 대해서도 그런 대화를 위한, 우리를 위하기 위한 대화, 대화를 위한 대화…… 우리가 한번 대화했다 이렇게 해서 미국이나 중국한테 가 가지고 '남쪽하고는 대화 다 끝냈으니까 대화하자' 이렇게 하는 대화로써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이것을 그간에 누차 얘기, 온 환경에 있다,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야말로 북한이 또 북한 지도부가 정말로 제대로 된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될 거다, 남북관계를 제대로 가지고 가고 그런 바탕에서 천안함·연평도 문제 해결하고 또 그런 바탕에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이고 남북관계가 제대로 가는 길을 택하면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론 고위급 회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조건이 되면 정상회담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이런 접촉이 이루어졌다 이런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제대로 된 사과를 얻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보다 고위급 레벨에서 갔어야 된다, 우리나 북한이나, 이런 느낌이고요.

오히려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우리가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세 부서에서 실무자급이 가면서 어떤 사과 문안에 대해서 작성하러 가지 않았나 이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세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모든 게 다 단계와 순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장관님, 북한이 막가파 식으로 이번 남북 비밀 접촉을 폭로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그게 어디에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 점에 관해서는 예의 지금 또 이렇게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것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행태가.

(홍재형 부의장, 박희태 의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하루빨리 제대로 좀 돌아와서 남북관계를 제대로 가져가게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윤상현 의원 오늘 언론을 보니까 '이명박 정부하고는 얘기할 의사가 없다, 다음 선거에 친북 정권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나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건 우리 남남 갈등과 우리 정치 내부를 또 흔들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통전·선전·선동 차원의 얘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그런데요 내년 선거까지는 무려 1년 6개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대선까지요? 또 지난 1월 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주문했습니다. 5개월도 안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2월 달부터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화모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올 들어서 대화 모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1월 초부터…… 그래서 저희가 '평화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대화 모드는 아니다 그런……

○윤상현 의원 대화 제스처를 계속 해 왔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대화 제스처를 계속 해 온 것이지요.

○윤상현 의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이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그런……

○윤상현 의원 남북관계가 아무리 악화돼도 이런 식으로 나온 예가 없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왜 그랬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딱 '이거다' 이렇게 지금 드릴 만큼 그렇게 100% 판단이 아직은 가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윤상현 의원 일각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최근에 김정일이가 방문해서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얻지 못해서 불만을 중국에 표시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뭐 그런 지금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딱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오히려 최근에 남북한, 중국 간 접 정상회담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원자바오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남북한 간에 비밀접촉,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얘기가 오갔습니다마는 정작 김정일·후진타오 회담에서는 그런 얘기를 중국 측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중국에게 사후에 변명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래서 저도 일부 언론에서 그런 식의 보도나 얘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정부 당국자로서 확인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좀 더 북·중 관계를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장관님,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찬성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북한인권법이 지금 법사위에 계류가 돼 있고 장기간 지금 계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어떻게 '인권 민생'이라는 말이 들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외통위에서 통과돼서 법사위에 지금 가 있는 북한인권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내용도 상당히 보완된 내용입니다,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시면 여러 가지 북한인권에 관한 내용뿐

만 아니라 또 북한 지원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포괄적이고 또 상당히 숙고한 그런 가운데 나온 안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것이 통과되어서 그 목적 그대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북한민생인권법안에 반대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제가 북한민생인권법안이라고 하는 그 실제 자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그걸 제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윤상현 의원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껏 북한 정권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관된 행동패턴을 유지해 왔고 그때마다 결실을 얻어 왔습니다. 도발과 협박 그리고 보상이라는 악순환이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북정책은 평양에 대해 그런 경험적 확인을 인식시키고 지금까지의 행동양식은 잘못됐다, 생각을 바꾸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일각에서조차 이 정책을 바꾸라고 합니다.

총리님, 이런 주장을 듣고서 평양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북한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이런 전략을 가지고 공세를 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폭로한 그 내용도 그 작전의,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소위 남측에서 남남갈등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고 아마 상당히 즐기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우리 식 방법이 옳았다. 다음번 도발은 더 세게 하자' 이렇게 서로의 오판을 격려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원칙 없는 대북정책의 변경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가짜 평화를 구걸하느니 진정한 평화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도 총리께서 직접,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정상적인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 대북정책을 세웠고 그것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기조로 하는 진정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와 같은 정책은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대화의 문은 열어 놓고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성 있게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현 의원 한미 SOFA의 환경권 조항이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문제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도 함께 아울러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SOFA에 환경오염 치유 및 배상에 관한 규정들이 있는데 이러한 규정들로써 충분한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걸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가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결국 그러면 개선 방향을 국무회의에 의제로 올릴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네요?

○국무총리 김황식 물론 검토해 가지고 그것을 국가정책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전 단계에서 관계 실무자들의 토의라든지 또 관계 장관의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총리,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한 지난 30일의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희석폭탄용 법안'을 급조해 북한인권법 속에 섞어서 물 타기로 없애 버리려는 전술이고, '대치용 알 박기 법안'을 급조해 북한인권법 의결을 저지하겠다는 저급한 꼼수입니다.

북한인권법을 누더기로 만들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회법은 법사위에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이건 타협안이 아니라 우둔한 절충주의의 산물일 뿐입니다.

여야를 떠나 절대 다수 의원님들께서도 북한인권법에 찬성하고 표결을 원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에 호소합니다.

당 지도부에게 국회의원의 표결을 누르고 막을 권한이 없습니다. 더 이상 법사위 뒤에 숨지 마

십시오. 비겁한 일입니다.

다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표결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표결 결과가 기록되는 것이 그토록 정말 부담스럽다면 여야가 표결 방식을 무기명 표결로 바꾸어 진행하면 됩니다.

결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인천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을 출신의 민주당 홍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과 중산층은 물가 폭탄으로 생활 경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비핵 개방 3000이라는 대북강경정책으로 한반도는 평화도 외교도 안보도 모두 파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 통합과 공정 사회를 주장하지만 세종시 이전,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의 국책사업 결정 과정을 보면 공정하지도 사회 통합을 이뤄내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는 공정하지 못한 조약, 주한미군지위에 관한 협정, 즉 SOFA 때문에 우리 땅에 다이옥신이라는 인류가 만든 가장 위험한 독극물을 갖고 있는 고엽제가 매립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주권 국가로서 당당치 못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어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신지호 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6년 11월 캄보디아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한 것이 마치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연루된 것처럼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영표 의원 정부의 판단이 어떠한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홍영표 의원 그러면 부산저축은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는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하는데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홍영표 의원 저는 어제 이 자리에 앉아서 참기가 막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억울하게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부관참시를 도대체 몇 번이나 해야 끝나는 겁니까?

저는 정부도 그렇지만 한나라당에서도 더 이상 고 노무현 대통령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본질은 이 정부가 금융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관리 감독이 잘못된 것은 정부하고는, 정권의 시점하고는 관계없이 누적되어 온 관계기 때문에, 이 정부도 관리 감독을 잘못했고 또 그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돼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다 저 정부다 그걸 구분해서 누구 잘못이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의원 그래도 지금 청와대의 권력 실세들의 이름이 나오고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한 정치적 보은 인사, 은진수 감사위원 이런 이름까지 나오니까 지금 전 정부로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님 잠깐만 계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홍영표 의원 정책의 실패,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정부의 정책의 실패라고 거론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의 정부 때 '상호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줬다,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높여 줬다 이겁니다. 맞죠?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홍영표 의원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PF의 한도를 늘려줬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홍영표 의원 아니, 상호금고에서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준 것이, 10년 전에 바꿔준 것이 문제라면 이 정부 들어와서 바꿨으면 되는 거 아

닙니까, 다시 상호금고로?

그다음에 예금자보호도 2000만 원, 당시에 저축은행에서 사채로 빠져 나가고 또 외국으로 돈이 유출되니까 5000만 원으로 올리자 이렇게 당시에 부산 정치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게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시에 그렇게 했더라도 이 정부 들어와서 문제가 됐다면 다시 낮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PF대출을 확대한 것, 2008년도 이 정권에서 파악했지요, 그때부터? 문제가 있다, 파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지금 이 정부는 집권 4일차가 아닙니다. 4년차입니다. 그래도 전 정부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세대에서 이루어진 이런 정책 이것은 그 시점에서 나름대로 경영 정상화라든지 그때의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이루어졌겠지만 결과 그런 것들이 오늘의 사태에 이르게 되는 하나의 단초가 됐다 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정책 예견 능력의 실패가 부분적으로는 있었다, 그러나 그것에 모든 책임을 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태가 생겨서, 말하자면 PF대출이라든지 부실이라든지 또 대주주·경영진들의 불법행위가 생기면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되는, 또 과거에 관리 감독자들의 책임도 있고, 이건 종합된 이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고요.

이번 저축은행 사태의 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어쨌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경영진이나 대주주나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로비를 통해서 어떤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전부 책임있게 처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하튼 퇴출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감사원 감사나 이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실패했다, 어쨌든 로비가 실패를 했다……

이 정부에서, 말하자면 조금 뒤늦었지만 그런 점들을 인지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로비가 실패했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금융감독 체계라든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책임자를 가려서 엄정한 책임을 묻고, 또 가능하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본 서민들이……

○홍영표 의원 예, 좋습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홍영표 의원 이 저축은행 로비의 실체는, 본질은 부실로 인해서 퇴출되어야 할 저축은행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겁니다. 퇴출 저지 로비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로비가 있습니다. 삼화저축은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화저축은행은 영업정지 되고 나서 바로 우리금융에서 M&A 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을 사실 저축은행 가지고 길게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삼화은행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명확하게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우선 제가 한 가지 사실을 좀 묻겠습니다.

신삼길 씨와 박지만 씨 그리고 청와대 정진석 정무수석이 아주 긴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이 박지만 씨는 신삼길 씨가 연행되기 2시간 전에 같이 식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박지만 씨 부인 서향희 변호사는 삼화저축은행의 고문변호사였다가 사건 직후에 사임했습니다.

아니, 고문변호사면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오히려 변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실 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그런 내용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예,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장관님께서 남북 비밀회담 추진 관련해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 이 양국 간 비밀 접촉의 내용을 한쪽 당사자국이 일방적으로 폭로하는 것은 아마 세계 외교사에 전례가 없는 참 엽기적인 사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좀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 경위야 어떻게 됐든 참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추락한 국격과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은 어떤 식으로도 복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오늘 계속 '비밀 접촉은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고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 그런데 만에 하나 북한이 추가적으로 녹취록 같은 것을 폭로하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녹취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영표 의원 아니, 좋습니다. 아니, 그냥 제가 그렇게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돈봉투 관련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하여튼 모든 전 정부에서 대북 접촉을 할 때 정부 대표 간에 만남이 있는 자리에서는 돈봉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돈봉투 없었지요? 확실히 없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없었습니다.

○홍영표 의원 이것도 만약에 북쪽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다시 폭로를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것은……

○홍영표 의원 그때는 사퇴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건 뭐……

○홍영표 의원 사퇴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 진퇴 문제에 그렇게……

○홍영표 의원 아니, 진퇴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 지금 통일부장관 한 명이 사퇴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예.

○홍영표 의원 세상에 이런, 대한민국의 국격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됐습니다.

다음에 총리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총리님, 고엽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캠프 캐럴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땅속에 고엽제가 묻혀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에 지금 집중이 되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 거기에 매립되었다는 증언과 사실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캠프 캐럴 외에는 어떤 조사할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아시다시피 미군기지 이전받은 것에, 2003년 이전에 반환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때는 환경 관련 이런 조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다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는 한미 간에 그와 같은 소정의 환경조사를 거쳐서 또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근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든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아마 과거 고엽제, PCBs, 오염모래, 각종 오염된 화학물질이 매립됐다는 것이 여러 가지 증거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하신다니까 그것을 오염의 여러 가지 상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환경주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환경오염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치유 과정에 대해서 미국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정말 미국이 한미 동맹을 중요시한다면, 아마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 기술은 미국 7함대가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이런 데서 지금 문제가 되는 캠프 캐럴을 비롯한 이런 미군기지들에 대해서 파견 조사, 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정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미국한테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당연히 미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을, 심각성을 인식하고 한미 공동조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공동조사단에서 한미 양국의 환경 전문가, 또 우리 측 대표단에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하고 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또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영표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의 캠프 마켓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홍영표 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 좀 잠깐 봐 주시지요.

캠프 마켓은, 지금 부평구 인구가 60만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캠프 마켓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 캐럴에 있었던 독극물을 캠프 마켓으로 옮겼다 이러한 미군 측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1991년 간행된 미 육군공병단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다른 화학물질인 수은 폐기물 10파운드, 석면 2580파운드, 트랜스포머 오일 448드럼을 처리했다고 하고 오염 모래를 매년 100t씩 캠프 마켓에서 처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2008년·2009년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한 위험 물질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시에 이 캠프 마켓 내부는, 특히 DRMO라고 하는 그 시설은 미군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조사조차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환경 기초조사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이게 좀 불충분하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미군의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엄청난 유해물질들이 캠프 마켓에서 처리된 것 같은데 이번에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아시다시피 미군이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미국 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게 반환이 될 때 비로소 한미 간에 토양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캠프 마켓은 아시다시피 2016년에 우리 측으로 인도가 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이번 달 중에 DRMO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반환에 관한 협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DRMO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반환이 되면 그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미국 측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환경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에 따른 합당한 치유를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총리님, 제가 엊그저께 환경부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캠프 마켓에 대해서 주변지라도 다시 정밀조사를 할 계획이 없느냐 그랬더니 2008년·2009년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부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돼서 60만이나 되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정부가 좀더 2008년·2009년 이상의, 주변지라도 좀 정밀조사를 하는 것은 정부의 어떤 책무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 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총리님께서 그것을 좀 약속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홍영표 의원 그리고 DRMO는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반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DRMO를 반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홍영표 의원 외교부장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SOFA의 문제점이 이번에 캠프 캐럴의 사태로 인해서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미국과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들어가서 조사할 수도 없고 또 조사 결과가 나와도 미국과 합의가 안 되면 이것을 공표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환경법과 환경 기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 맞지요?

그래서 이 SOFA는 반드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하여튼 저희들 정부에서도 이번 캠프 캐럴 조사 결과를 보면서 개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영표 의원 알겠습니다.

SOFA 문제는 반드시 개정을 해서 환경 주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하여튼 이번 조사에 우선 현재의 법규를 적용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홍영표 의원 예,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는 민주 정부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매도하더니 집권 4년차인 지금도 저축은행 등 잘못된 정책과 관리·감독 소홀을 과거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의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반노동자적인 정책으로 쌍용차를 비롯한 많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위해 1953년 한미방위조약이 체결되었고 그 후속 조치로 1966년 주한미군지위협정이 체결된 지도 4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1960년대, 70년대 주한미군기지에서 화학물질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동조사단에게는 철저한 조사로 진실을 밝혀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증언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부도 과거 주한미군의 잘못된 행동을 따져 묻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캠프 캐럴뿐만 아니라 캠프 마켓 등 미군이 증언한 지역도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해야 합니다.

미군기지 부지만 돌려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부지 안에 어떤 화학물질이 버려졌는지 토양오염 정도는 어떤지 파헤쳐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후손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한미 동맹을 노래 부르듯 외치면서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독극물을 불법으로 땅에 묻는 것이 진정한 한미 동맹은 아닐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나아가 이번 사고가 불평등한 SOFA 협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홍영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두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아 의원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두아 의원입니다.

오늘날 사이버 테러는 한 국가의 안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과거 세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안보 위해 요소입니다.

이는 지난 2007년 러시아가 에스토니아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 이 나라의 국가 시스템을 3주간 마비시킨 사건을 통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2009년 7월과 올해 3월에 디도스 공격에 이어 지난 4월에 발생한 농협 전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나라 전체를 큰 혼란에 빠뜨린 대형사건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번 해킹사건은 북한에 의한 조직적인 대남 사이버 테러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농협 사태를 계기로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지능적이고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공격의 대상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박희태 의장, 홍재형 부의장과 사회교대)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3일 농협 전산망 해킹의 주범으로 북한의 정찰총국을 지목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관여한 초유의 사이버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를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두아 의원 농협 사태에 대한 수사 과정을 보면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일종의 한계에 부딪쳐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었고 수사 개시일로부터 5일째 되는 날에야 국가정보원에 협조를 요청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러면 국정원이 이 수사에 관여한 건 알고 계십니까? 날짜는 5일째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수사 결과는 수사결과인데 이 수사에 뒤늦게 국정원이 관여한 건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전문 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 수사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두아 의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이런 수사

를 할 때, 농협이라든가 금융망과 관련된 사이버 테러 사태가 벌어졌을 때 수사를 개시하면—검찰에서요—국정원이 초기 단계부터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두아 의원 이 법령이 어떤 근거로 그런지도 총리께서는 좀 알고 계시지요, 법률 전문가라서?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이두아 의원 아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7조에 의해서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이두아 의원 그런데 복수의 인사들은 이번 농협 사태 때 해당 조항 때문에 국정원이 즉시 조사에 나설 수 없었고 검찰의 요청으로 나중에서야 농협 서버를 관리하는 IBM 직원 노트북을 조사했으며 축적된 자료를 통해 해킹 소행을 북한으로 단정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런 보고도 받으셨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가정보원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농협 전산망 서버에 대한 분석 작업에 참여했다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더 전문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이 함께 노력을 한다면 더 빨리 사실 관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두아 의원 그렇다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상 해당 조항이 좀 보완되거나 수정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정원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야말로 사익의 보호 때문에 그런 것을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있는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더 보다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서로 간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두아 의원 지금까지 법률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접근이나 휴대전화 감청을 금지한 데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기관에 의한 법의 오·남용이나 민간인 사찰을 막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것이 그 기본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가치라는 것 또한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총리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관련 법령들을 국민들을 더욱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측면으로 현재 안보 환경에 맞추어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는 우리 정부의 사이버 대응 체계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농협 사태를 보면서 생각하신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보 상황이나 또 공공·민간 영역이 점차 융합되어 가는 최근의 현실을 반영한다면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역량이 한데 결집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그것을 전 국가기관이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또 관련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은 법률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또 관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보강하는 것이 지금 저희로서는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두아 의원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안 업무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국가정보원, 방통위, 국방부, 행안부 등 각 부문별 담당 기관이 분산 수행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정부 내부적으로 사이버 안전 정책과 관리를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복수의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국가 사이버 보안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이것을 법률로 규정한다면 어느 부처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그런 문제들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의 수립 과정에 있어서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금년 6월 중에, 이달 중에……

○이두아 의원 마련이 되는 겁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마련이 될 겁니다.

그 플랜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어느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기관 간에 어떤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하는 등등의 문제들이 다 그 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디가 사이버 보안 업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지는 답을 안 하셨는데 알고 계실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태에서 또다시,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 이런 사태가 생긴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까? 수행할 수 있습니까, 또한?

○국무총리 김황식 국가정보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이런 기관들입니다.

○이두아 의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훈령에 따라 각 부처의 사이버 보안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또 각 부처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소관 법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가 상충되거나 중복되는 등의 혼선이 일어난다는 분석이 있으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빨리, 6월 중으로 이 마스터플랜도 만들고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도 거기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시고 요청하실 것은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에 또 요청하실 게 총리께서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법령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견을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관련된 법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등 이러한 관련 법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컨트롤타워를 포함해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 등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계라든지 또 관련된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점에 대해서 지금 마스터플랜에 포함을 시키고 그것을 조속하게 처리해 내고 그 과정에서 법률을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회의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아 의원 법령 제정은 국회의 업무이기는 한데요. 또 일각에서는 정부 각 부문의 사이버 보안 업무에 정통하지 못한 비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점이 또 큰 문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무는 보안 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하나 정부 부처의 순환근무 관행으로 인해서 많은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보안 업무에 대해서 파악할 때쯤이면 새로운 부서로 발령이 난다거나 새로운 직원이 오게 되면 보안 업무에 대해서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강구해 보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사이버 보안 업무는 정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역량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배치돼서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지적이고, 따라서 인력 배치구조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순환근무 해 가지고 와서 배워서 일하다가 능숙해질 만하면 떠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깊이 개선을 하고, 또 기왕에 있는 요원들이 전문성을 계속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육 지원, 전문교육 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두아 의원 총리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께서 오늘 여러 차례 질의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에서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발언을 전하면서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9일 북한과의 비밀 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했다' 이런 폭로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북한의 성의 있는 사과 없이는 남북회담뿐만 아니라 교류협력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전혀 그 기조에 변화가 없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두아 의원 그렇다면 우리 측 인사들이 북한과 이번에 접촉한, 비공개 접촉을 한 이유에 대

해서 다시 또 말씀을 좀 간단히 해 주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아까도 좀 길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진정으로 시인·사과·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지 결과적으로 남북 대화가 정상화되고 또 그런 남북대화의 정상화를 바탕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원칙적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대해 왔고, 이번의 비공개 접촉에서 바로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이두아 의원 그렇다면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사실 직접 만나 따질 것은 또 따지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접촉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또 이러한 목적으로 팀이 꾸려져서 접촉을 했을 텐데, 청와대 비서관이라든가 통일부 정책실장 또 국정원의 국장 이런 분들이 실무 접촉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과 통일부 정책실장, 국정원 담당 국장은…… 그 사람들의 업무가, 이와 관련된 업무가 자신들의 업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구체적으로 어떤 실무자들이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두아 의원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없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공개적으로는 확인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정부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실무자들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두아 의원 실무자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참여한 실무자들 중에 비선라인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갔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러면 이번 접촉과정에서 북한이 보인 반응이 어땠는지, 비공개 실무 접촉에서요. 또 북측 인사들의 발언내용을 밝혀 주실 수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리 북한이 참 무책임한 이런 폭로 행태를 보인다 하더라도 저희가 똑같이 그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하고 지금 맞대응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으로 보나 또 그야말로 G20 정상 국가로서 국제적인 그런 위상으로 보나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제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떻다 저떻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렇다면 왜 북한은 그렇게 국제적인 관례를 벗어난 돌발적인 행동을 보였는지 그 배경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견해를 좀 여쭤 볼 텐데요.

그런데 한반도 정세의 여러 가지 고려를 해 볼 때…… 어제 한 언론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북한은 남북 비밀 접촉의 폭로 배경을 '북·중회담 당시 북한이 중국에게 남북한 정상회담을 위한 남한과의 접촉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보도와 분석도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런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자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남북 간 접촉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베이징에서 비공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데, 그렇다면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석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통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나온 배경이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아마 그 질문을 또 마땅히 궁금해 하시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도 그 점에 관해서는 면밀히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딱 구체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두아 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변하지 않을까, 또 특히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조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많은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안을 통일부가 내놓느냐, 이런 것도 국민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평가해야 되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으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두아 의원 이 부분은 말씀을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 부분 정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과의 비밀 접촉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명쾌하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나 여러 사람들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드러난 비밀 접촉, 비공개 접촉에 대해서 몸을 사리거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확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오해와 불신만 키울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 노리는 남남 갈등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남북 관계 및 대북정책의 원칙에 대해서 국민의 동의와 이해를 얻기를 바랍니다. 이번 북한의 비밀 폭로가 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오히려 국민들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리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북한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주민들에 대해서 인도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WFP도 그렇고 EU도 여기에 대해서 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최근 사단법인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에서 외부 지원 식량의 북한 내 분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탈북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봤습니다.

장관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저는 아직 그 내용을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두아 의원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탈북자 대부분이 '지원되는 식량은 군량미 및 간부 배급용으로 전용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식량 지원이 북한군에 73.6%, 당 간부에, 정권기관에 주로 돌아가고 특권층에 돌아간다' 이렇게 중복 응답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원 취지인 취약계층인 아동 및 일반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답변은 어느 정도일 것 같습니까, 북한 탈북자들이 인식하는?

2.2%의 답변이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돌아간다고 탈북자들이 답한 게 2.2%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제가 어떤 특정 조사나 보고서,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두아 의원 그런데 이 숫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응답자의 절대다수, 98.4%는 '국제기구들의 식량 분배 감시 현장을 목격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이두아 의원 응답자 중 1.6%만 '현장을 목격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식량 분배 감시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고 형식적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지금 이 식량 지원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답변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래서 북한에 대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배 투명성,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 정부도 그런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아 의원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설문조사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실시해서 보다 정확한 북한 내 식량 사정과 또 지원된 식량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는지 파악해서 국제기구라든가 각국에 전달할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게 효율적인 식량 지원과 정말 북한주민의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시작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아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정부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면 이를 유럽연합이나 세계식량기구에 제시하면 국제사회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북지원 활동을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두아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활동을 주도하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대북지원 활동을 벌이는 단체는 물론 주변 국가들과 협력해 대북지원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원칙을 지키면서 국제적 관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이두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희망연대의 존경하는 송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의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홍재형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입니다.

총리, 나와 주세요.

남북정상회담 계속 추진해야 되겠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정상회담보다도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남북대화가 이어지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의원 지난 5월 30일 북쪽에서 군 통신선 폐쇄, 금강산 연락소 폐쇄, 5월 31일 금강산관광지구를 북한이 독자적으로 관리한다는 특구법 채택, 6월 1일 남북 비밀 접촉 사실 폭로, 이것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정말 일부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천인공노할 뒤통수치기입니까, 아니면 금강산 재개를 압박하는 절박한 김정일의 몸부림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여러 가지 평가나 추측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송영선 의원 분석이 안 됩니까, 비밀입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것을 책임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적절치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선 의원 왜 그렇지요?

5월 25일 날 황금평 개발을 만약에 중국에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더라도 북한이 이런 짓을 할 거라고 총리님 추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누구에 대한 정책이어야 합니까? 대상이 누구여야 됩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대북정책은 북한을 상생공영으로 이끌기 위한 것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서 힘을 얻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책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의원 저는 대북정책이 북한 정권과 북한주민 둘 다를 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렇……

○송영선 의원 김대중 대통령 때의 대북정책, 햇볕정책의 문제점은 김정일 정권과 북한주민을 동일시한 잘못된 가정, 우리 민주주의식 사고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MB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어떻게 하면 북한의 주민들이 함께 잘살 수 있는지, 그야말로 상생공영이니까 정권도, 북한의 정권 담당자들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함께 뜻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선 의원 그 이론이시겠지요. 실상을 봅시다. 비핵 개방 3000이 북한 변화 유도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김정일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주민도 국물도 없습니다. 김정일이 비핵화하면 주민 살아납니다. 지금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습니다.

핵을 정권 유지의 최고의 목표로 삼는 김정일이 북한주민을 위해서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그런 지적은 당연한 지적이신데…… 그러나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비핵화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대북정책의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송영선 의원 저는 우리가 나서서 김정일에게

압박을 가하면서 북한주민을 살리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핵 개방 3000만이,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한 부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절대적인 왕도는 아니다.

이제 대북정책은 엄밀하게 말해서 김정일 길들이기 정책을 넘어서서 한반도 경영 구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주도권(initiative)을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동감합니다.

○송영선 의원 그렇다면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많은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쪽은 우리 쪽이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은 추진되어야 된다, 우리 쪽에서 해야 된다, 그러나 전제를 확고히 해두고 출발을 할 때는 김정일을 먼저 용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이 앉아서 얘기할 기회를, 우리가 융통성을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협력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 또 중국과 북한의 관계 또 한국·미국 또 북한과 미국 여러 관계들이 그 틀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또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북한이 종래와는 다른 틀에서 진정한 대화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상생공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과거에 행해졌던 그런 방식, 노력을 하고 그것이 좌절되고 또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고 하는 이런 것은 되풀이되지 않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전개되어야 한다하는 그런 원칙은 세워 놓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요구에 순응해 올 수 있는 각종의 노력은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선 의원 저는 지금 누가 비밀접촉을 했느냐에 대해서 정부나 국회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북한에게 남북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사과를 구걸할 것도 아니다, 한반도의 경영자로서 대통령이 김정일을 직접 만나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한반도에 또다시 북한이 도발을 시도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 받아내는 것이 진정한 한반도의 경영자로서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보수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천안함이나 연평도에 대한 사과를 받지 않고 정상회담을 시도하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비난하거나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 조치를 못 내린다면 저는 결코 비전을 가진 지도자, 통일을 원하는 지도자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미래 경영자가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직접 정상회담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전제가 되겠습니다. 진짜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어떻든 현실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모든 문제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고려·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보다 융통성 있는 자세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만난다고 해서 또 그런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제 문제를 정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말하자면 어떤 도그마에 빠져 가지고 그 틀 안에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입장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세요.

남북 경협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 경협은 지난 5·24조치로 지금 상당부분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기타 남북 간의 거래 이것이 중단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송영선 의원 남북 경협이 북한 개방·개혁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 경협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선 의원 그런데 지금 북한 개방·개혁이,

우리 정부가 취하는 정책 라인을 보면 비핵이 전제되어야만 개방·개혁을 유도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남북 경협하고 사실 그간의 비핵화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연결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해온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남북 경협이 잠시 중단된 그런 조치는 지난 천안함 사태 이후에 5·24 조치로 인해서 남북 경협을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북한이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개혁·개방에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남북 경협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배가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것이 반드시 선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물론 비핵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남북 경협이 보다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선 의원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한반도에 정치적인 문제나 군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경협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계산으로 시작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개성공단의 시작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을 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 정부에 들어와서도 개성공단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고 실제로 지난 2, 3년 동안 개성공단은 상당히 확대되고 발전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어떤 의미에서 확대되고 활성화되었다고 하시는지 몰라도, 물론 생산성은 높아졌습니다마는 실지로 기업인들 얘기를 들으면 생산성이 나오는 것은 투자하고 몇 년 후에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시는데,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의원 이것 왜 만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그간의 남북 교류협력 체계 시스템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지금 목표를 보면 전문 인력이 없고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서 한다는데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 사람,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부의 대북 철학입니다. 경협을 정치와 분리시키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진흥원을 만들어 놔도, 150억 들여서, 90명 들여서 세워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우리가 큰 틀에서 남북 경협을 규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가느냐의 문제하고 또 실제로 지금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는 매우,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남북 경협이 제대로 되려면 그야말로 남북이 경협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구조적으로 만들어지는 그것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만 되어서도 남북 경협이 제대로 되어 가지는 않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남북 경협이 현장에서 제대로 되어 가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거다. 지금 남북……

○송영선 의원 5·24조치 전에 남북교류협력진흥원이 없는데도 남북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의 남북교류의 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북한에는 민경련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전부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개별 기업 수백 개가 다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클레임을 제대로 걸 수도 없고 시쳇말로 돈을 떼어도 제대로 받을 수도 없고 또 그 거래가 투명성이 없어 왔던 것이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 보다 선진화되고 보다 현대화된, 제대로 된 남북교류 시스템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조직을 정비하고 체제를 정비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만들겠다……

○송영선 의원 추가 남북 경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교류협력진흥원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할 일 없는데도 월급만 주게 되는 꼴은 안 되도록 하십시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것은……

○송영선 의원 그리고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지금 몇 % 되는지 잘 아시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송영선 의원 얼마입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북한이 하여간 거의 70%……

○송영선 의원 2010년 통계로 83%입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이상을 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이것을 간단히 보시면 안 됩니

다.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는 황금평이 북한에게는 아주 중요한 젖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독자적인 경제개발을 할 구역을 찾았습니다. 개성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구역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중국에게는 큰, 직접적인 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no)를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중 의존도가 거의 10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땅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한반도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중국의 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대안, 남북 협력·경제 협력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 주세요.

2003년 1월 25일 우리 디도스 공격 받았습니다. 국방부 전산망 플러스 36개 홈피, 공격을 받았어요. 2009년 7월 7일 디도스 공격 받았습니다. 2011년 3월 4일 또 농협 전산망.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총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2009년 7월 7일 디도스 공격을 받고 난 뒤에 찾아낸 게 북한 평양 체신청발 IP가 나왔습니다. 이번 농협 전산망 공격에도 역시 IP 주소가 북한 평양 체신청발 IP가 나왔습니다. 물론 총리님은 2009년 7월 7일 총리를 안 했습니다. 정부가 뭐 하고 있습니까? 2009년 이런 상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북한이 공격했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데 2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또한 대책도 안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아까 다른 의원님이……

○송영선 의원 또 같은, 유사한 문제……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라는 게 2002년부터 만들어졌습니다. 2005년부터 성격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대로 흘러가도록 뒀습니다.

정부가 뭘 하고 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금년 6월 안에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국방부가 이런 일이 있을 때 2009년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뒷북치는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되고 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사이버 공격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을 누구보다도 많이 쓰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영선 의원 분명히 국민들에게도 알려 주고 정부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예.

계속해서 국방의학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육군1군사령부 의무과장, 국군의학연구소 소장, 육군본부 예방의학과 과장, 전공이 뭐라고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 전공을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전부 수의과 의사들입니다.

장병이 짐승입니까? 동물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최근 논산훈련소 훈련병 사망사건 아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영선 의원 원장 병과가 뭡니까?

이분은 의사도 아니에요. 의무행정병과 출신입니다.

제가 17대 국회에 들어오고 난 뒤에 이 군, 그 당시에 노충국 씨 사건, 윤여주 씨, 오주연 씨, 다 암으로 죽었습니다, 제대하고 한 달, 석 달, 여섯 달 내에.

치열하게 싸워서 군 의무장비획득 예산을 크게 올려놨습니다.

2009년 543억 원, 2010년 485억, 2011년 460억 원으로 해 놨습니다. 2009년에 비해서 80억 이상이 깎였습니다.

저는 국방의학원까지 직접 안 된다 손치더라도 의무장비 구입뿐만 아니라 전문의를 가져와야 되는데 듣는 얘기에 의하면 기재부가 "국방의학원 만드는 건 경제성 없다", 그러면 무기는 경제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제끼는 겁니까?

병들이 경제성이 있어야 병들을,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합니까?

또 청와대 의사 출신 비서관이 "이것 말도 안 되는 거다" 해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국방의학원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고 지금 거의 포기된 상태입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국방의학원이 검토가 됐던 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군 의료체계를 더 전문성 있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논의가 됐고 또 그중의 하나가 정원 외로 의사를 양성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 장기간 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지금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 총리실에서 금년 10월까지 군 의료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불합리한 일이나 또 우리 장병들이 의료 부실로 인해서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하튼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거기에 가장 합당한 방법이 지금 무엇이겠느냐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또 고려를 해 가면서 대안을 금년 10월 안에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총리님, 우리 지금 군의관이 한 2200명 정도 되는데 단기복무 군의관이 2100명입니다. 91명이 장기복무병입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영선 의원 총리님 아드님이 지금 군에 있다면 수의과 의사한테 내 아들 건강 검진하라고 절대 안 맡겨 두겠지요?

그렇습니까? 맡겨 두겠습니까?

아니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또 단기복무 군의관이 이렇게 나가고 91명이 실지로 4700개의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내 아들 군대 보내겠습니까? 아니지요?

국민한테 약속하십시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들을 군대 보낼 수 있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래서 군 의료체계 개편에 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여하튼 우리 국민들이 군대를 보내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여하튼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예,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국무총리 김황식 예.

○송영선 의원 다음 외통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한미 FTA 협정비준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의원 저도 이걸 위해서 17대 국회의 제2정조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직접 담당도 했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개가를 올리기를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송영선 의원 그런데 개성공단 제품이 북한산입니까, 한국산입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금 이 문제는 한미 FTA에서는 일단 발효가 된 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항이 돼 있습니다.

○송영선 의원 그것은 어느 항에 그렇게 붙어 있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지난번 그 2007년에 그 당시 협의를 했을 때도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007년에.

○송영선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4월 행정명령에서 지난 2008년과 2010년 각각 발효된 행정명령 1만 3466호, 1만 3551호의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한 내용에 보면 “북한의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미국으로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 행정명령을 4월 19일 날 발표하기 전에 3주 전 3월 31일 커트 캠벨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미 FTA가 체결되더라도 북한산 제품의 미국 반입은 금지될 것이다. 우리는—쿼테이션(quotation)입니다—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국에 분명히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다면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이 아닌 북한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떡하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글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FTA상으로는 발효 1년 후에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이 유효하니까……

○송영선 의원 그 발효 후에다가 미국이 그건 도저히 못한다 하면 그냥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뭐 그건 그때 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발효 후 1년 후의 상황을 지금 미리 상정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 정부로서는 당시 남북관계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미 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발효 후의 상황이 1년 내에 토론

해서 될 것 같으면 왜 캠벨이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행정명령을 발표합니까?

불필요한 조치 아닙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인 남북관계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발효가 된 후에……

○송영선 의원 그건 장관님의 해석이시지요.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 당시에 다 저희들이 미 측하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FTA 문제에 대해서 한미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인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확고한 인식이 뭡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확고한 인식이라는 것이 우선 발효된 후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송영선 의원 다른 이슈들도 다 이게 발효된 후에 그 서브커미티(subcommittee)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만 특별히 그렇게 저희가 합의를 해 놨습니다.

○송영선 의원 제가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건 FTA는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되어야 되고 발효가 되어야 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송영선 의원 그러나 행정부처가 발효되는 것으로 행정부처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으로 생각……

○송영선 의원 이것은 또 다른 엄청난 논란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발효되는 시점부터 움직일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로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군에서 전쟁 중에 혹은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통신장비입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송영선 의원 커뮤니케이션 돼야 되잖아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송영선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군이 보유하고 9200만 원 상당의 최신 휴대용 위성통신장비가 이동 중에는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아시지요?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송영선 의원 또 통신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데에 10분 이상 걸립니다. 뛰면서 사용도 못합니다. 100만 원짜리 우리 일반 휴대폰보다도 더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개발이 시작된 게 2002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 이걸 더 소위 말하는 군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 장비는 사실 일반 장비보다도 더 뛰어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군 장비를 획득하는 체계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군에서 소요를 제기하고 그것을 합참에서 다시 조정을 하고 그것을 다시 중기계획에 담은 뒤에 다시 예산 반영을 하는 이런 굉장히 오랜, 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첨단, 발전한 IT 이런 무기체계 개발에는 오히려 좀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기체계 개발 단계를 좀 더 저희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더 좋은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제가 적극적인 제안을 하겠습니다.

진화형 ROC, 나선형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거지요.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기술을 그때그때 받아……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상용화된 부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상용통신장비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적극 고려하시라는 겁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예,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영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반도의 경영자로서, 한반도의

주인으로서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존경하는 송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금정 출신의 한나라당 존경하는 김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世淵 議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금정 출신 한나라당 소속 김세연입니다.

저는 오늘 2만 명을 넘어선 탈북자 지원 문제와 국방개혁 문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과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훈련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탈북자 수가 2만 명을 돌파했고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金世淵 議員 이들이 남한 사회에 어떻게 정착하느냐는 문제가 단순히 현재 2만 명을 넘은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문제를 넘어서 향후에 통일이 실질적으로 다가왔을 때에 2400만 명 북한주민들과의 원만한 사회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주 단초가 되는 중요한 순간에 지금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金世淵 議員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金世淵 議員 그런데 현재 생계급여를 받는 일반 국민의 비율이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서 탈북민 출신의 생계급여를 받는 비중은 5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78.6%가 직업이 없거나 또는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물론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 또 북한이탈주민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들어온 지 뭐 몇 개월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뭐 1, 2년 남짓밖에 안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분들이 물론 들어오자마자 조기에 좀 정착이 제대로 되고 또 직업도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온 숫자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다 통계에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높은 숫자의 통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정착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적응이 잘 돼 가면 돼 갈수록 그 퍼센티지는 낮아질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전혀 다른 사회 배경, 성장 배경 또 직업을 갖기 위한 어떤 교육의 정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자란 우리 국민들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서 이분들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런 차원에서라도, 지금 탈북자들이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기초 조사를 거친 후에 하나원에 입소를 해서 3개월 동안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각 전국의 주거할 곳으로 흩어지고 있는데……

현재 하나원이 만들어진 지가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의 한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퇴소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그 만족도가 20%에도 이르지 못한다는 아주 좀 안타까운 그리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하나원이, 이분들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나원에 들어오게 되면 3개월 동안의 교육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매번 설문조사도 하고 또 이분들에게 필요한 교육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조적으로 이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이분들이 들어와서, 전혀 낯선 곳에 들어와서 그 3개월 동안 받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과 이런 것들의 만족도가, 저는 사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높을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우리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사회에 어떻게 잘 착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사회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맞춤형 교육도 주고 하는 많은 노력은 기울이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될 것이

있으면 또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하여간 노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비슷한 답변을 통일부나 하나원 측으로부터 계속 들어 왔습니다만 실질적인 개선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제3국을 떠돌면서 몇 년씩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들어와서, 하나원에서 체험식 교육도 최근에 많이 보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의식 교육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앉아 있는 것조차도 상당한 애로를 느끼는 가운데에서 어떤 주입식·강의식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육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못 느끼고 아마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런 만족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려 보자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하나원 운영에 관한 평가위원회를 좀 구성을, 이미 그런 위원회가 또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겠지만 탈북자 출신의 위원들이 참여하는, 특히 막 탈북을 해서 하나원을 막 퇴소하신 분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수년간 좀 더 많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이 북한에서의 어떤 체제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와 또 그 과도기에서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느끼는 그런 애로를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에 참여해서 실질적인 개선작업이 이루어지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좋은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경험이 많은 분들을 조금 우리 평가위원회에도 넣고 또 우리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항상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서 고칠 만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지금 하나원에 입소해 있는 그런 분들이 좀더 필요한 교육이나 또 내용이 뭔지 더 잘 파악하는 노력을 제도적으로 좀 기울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래서 통일부 관점이 아니라 탈북자 관점에서 운영 프로그램이 구상이 되어야 되겠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문제는 지금 전체 내부강사 14명, 외부강사 20명 중에서 탈북자 출신이 1명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고도 자주 받고 합니다마는 하여간 적절한 강사를 구하는 문제,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분들이, 되도록 한 두어 분들이라도 좀더 해서 그 내용, 그분들의 고초를 이해하면서 또 할 수 있는 분을 사실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만한 자원이 아주 우리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 또 여기 와서 생업에도 종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서 또 이렇게 골라야 하는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하시는 말씀의 취지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리고 현재 하나원이 향후 남북통합 과정에서의 아주 축소판 역할을, 시험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지만 이러한 남북, 어떤 사회 통합 과정에서의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가 마련하기 위해서 가칭 '남북한사회통합연구센터'라든지 이런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여러 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러한 통일 준비를 하는 이런 연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설립이 되었고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북한이탈주민들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센터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또 무슨 실을 만들든지 하여간 그것은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적으로 우리가 마련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연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金世淵 議員 그리고 이 부분은 외통부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재외공관에서의 심리상담, 심리치료의 어떤 중요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하나원에 오기 전에 관계

기관에서 합동조사를 하고 그 전에 재외공관 내지는 타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일정 기간 수용되었다가 오지 않습니까?

사실 탈북과정이나 3국의 어떤 유랑과정에서 받았던 충격이 이 단계에서, 초기 단계에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조치들과 또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이런 안정책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적인 불안 상태에서 수면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못 자는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태는 알고 계시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金世淵 議員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하나원 내에 심리상담사가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본원에 두 분, 분원에 한 분이 계시지요. 그런데 이 3명의 심리상담사들이 재외공관 요청에 의해서 1년에 몇 차례씩 해외를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는데 하루에 열네다섯 명 그리고 한 번 출장 갈 때 한 일주일 정도 다녀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번 잠깐 면담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통부와 함께 좀 근본적인,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찌감치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관련 부서인 외통부하고 잘 좀 상의를 하고 협조를 해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자면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재외공관에 결국 전문 상담사를 조금 상주를 시켜서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또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준비작업이 사실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라면 내일 당장이라도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관련 부서, 우리 예산 부서하고도 또 상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또 외통부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부서들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재외공관의 고통 받는 우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언제까지 대책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요, 딱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간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총리께서도 마침 앉아 계시지만 기재부, 외통부, 복지부 등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꼭 좋은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그리고 탈북자 자녀들,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구에 탈북학생 대안학교가 한 군데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일반학교에 진학해서의 중도탈락률이 현재 8.8%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한 학생의 경우에 중도탈락률이 1.4%입니다. 무려 6배가 넘는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이 더 바람직하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마는 통합교육에 바로 들어가기 어려운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간단계로서 대안학교를 거쳐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앞서 말씀드렸던 한 대안학교는 작년 11월에 문을 열어서 4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학생 수가 4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인근 아파트를 두 채를 빌려서 기숙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모들이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챙길 수가 없어서 보통 여기에 머뭅니다. 33평 아파트 두 채를 빌려서 남학생 25명, 여학생 23명이 그 아파트 한 채씩 선생님들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방개혁 관련해서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차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 공군에서 인사를 할 때 의외의 일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줄곧 전투기 조종사 출신 공군참모총장이 임명이 되었었는데 C-130 수송기 조종사 출신의 참모총장이

임명된 것입니다. 혹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짐작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제가 정확하게 미국 군 인사에 대해서 어떤 배경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미국에서는 좀 다양한 출신 배경이 참모총장을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종전에 하나의 출신이 하는 것보다는 좀더 조직에 변화도 주고…… 아마 조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제가 추측해 봅니다.

○金世淵 議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외의 통계를 보았습니다. 2009년도에 미 공군 역사상 최초로 전투기 조종사보다 무인항공기 조종사가 더 많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미래의 전쟁 양상이 좀더 변화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는 무인항공기가 앞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 그런 전쟁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양성 인원도 바꾸고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데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世淵 議員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쟁과 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잘 웅변하는 사실이라고 봐집니다.

2차대전 때 원폭 투하할 때 사용되었던 B-29 같은 폭격기 조종사 출신들 또 F-15를 비롯한 주력 전투기 조종사 출신들이 주로 군 수뇌부를, 공군 수뇌부를 이루어 오다가 특히 91년 이라크 전쟁 이후에 미국 공군의 역할이 냉전 종식 이후 소련과 대규모 공중전을 통한 상대 공군력 제압 후에 육군력과 해군력으로 다음 작전이 펼쳐지는 이런 전쟁 양상이 아니라 사막이나 산악전에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전쟁이 펼쳐지다 보니까 병참 보급의 중요성이 아주 높아졌고,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수송기 조종사 출신들이 이제 중용이 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전투기 조종사들이, 그 출신들이 주도해서 계획했던 차세대무기 개발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서 F-20이나 F-35 같은 공중전이 대규모로 벌어질 것을 상정해서 개발되었던 무기들이 '세계 최강의 무적의 전투기'라는 이름까지 붙었지만 사실상 지금 공중전에서 주적이 없었진 상태에서 구매 중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무려 4억 불 가까운 또는 1억 불이 넘어가는 이런 대당 비용이 드는 전투기가 아니라 무인항공기 '리퍼' 같은 경우에는 대당 800만 불 정도로 구입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군 수뇌부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젊은 시절에 자신들이 수행하던 그런 작전 개념을 염두에 두고 미래의 작전을 계획하는, 여기에 따른 무기 도입체계나 또는 여러 가지 작전에 어떤 결정을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전적으로 의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金世淵 議員 그런 점에서 현재 국방개혁안이, 지금 차관님께서는 민간 분야에서 길을 걸어 오셨지만 육군 중심의 어떤 시각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해·공군 출신 전역 장성들의 반발이 크게 보도가 되었고 한데, 자칫 이것이 해·공군의 자군 이기주의로 흘러서도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장관님께서 지금 오늘 출장 중이시지만, 육군 중심의 시각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채용되어서도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나 미래 전략에 맞게 통합군 개념으로 우리 국방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조치가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이번 국방개혁의 가장 중심은 지금까지 작전지휘권이 없었던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육군참모총장이나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께서 작전지휘권이 없어서 주로 양병, 그러니까 군사를 양병하고 군수 조달에 집중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군의 최고책임자가 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국방개혁의 가장 큰 핵심이고, 이를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합참의 기술도 좀더 보강해서 전체적으로 좀더 합동성이 높아지는 이런 것이 이번 개혁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혁 과정을 통해서 가장 큰 개편의 대상이 될 것은 저는 육군으로 보기 때문에 '육군 중심의 개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군에서도 지금 해·공군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전쟁 양상에 있어서 해군, 공군의 중요성이 더욱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해·공군이 더욱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이번 개편을 통해서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金世淵 議員 다음으로 국가 중요시설 방어훈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5일에 있었던 남북관계특위에서 제가 장관께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원전 폭파 시도와 같은 테러 시도가 있을 때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분기 1회 민·관·군·경이 향토사단 중심으로 합동훈련을 하고 있다" 하셨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1년에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국방부차관 이용걸 저희들이 연 1회는 지역군사령관 책임 아래 하고 있고 현재 나머지 국가주요시설에 대해서는 대통령훈령에 따라서 아마 월 1회 자체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실시 횟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원전뿐만 아니라 대규모 저유시설 그리고 LPG·LNG 저장시설 또 방송시설 또 금융망 등이 깔려 있는 지하공동구 이런 데 대해서 충분히 대비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방부차관 이용걸 앞으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군도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군에서도 합참의장께서도 고리원자력발전소를 가서 다시 원전의 중요성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훈련 도중에도 다시 저희들이 그런 모의훈련도 한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世淵 議員 예,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기 전에 북한인권법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 1일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북한만이 40년 연속 최악의 인권탄압국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다음날인 2일에는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uman Rights Watch)가 "북한은 전 세계에서 최악의 인권 학대 정권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바 있고 유엔이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라도 6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북한민생인권법을 상정하고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민생'이란 '일반 국민의 생활 및 생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북한민생인권법의 상정과 논의에 대한 합의는 민주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마침내 북한주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생이라는 명분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자칫 북한 정권 유지에 이용되는 퍼 주기식 지원으로 흘러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에게는 치료할 약과 먹을 밥을 제공하고, 독재정권에는 준엄한 심판을 가하는 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독재정권 몇몇의 신변 안전이 저해될까 봐 노심초사, 좌불안석 할 것이 아니라 굶어 죽고 맞아 죽는 우리 형제자매인 북한주민들을 구제하는 동시에 이들을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들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후적으로라도 반드시 처벌될 수 있도록 근거자료를 축적하는 계기로 삼아 동포의 피눈물을 닦아 주는 법이 되길 바라며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김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은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恩宰 議員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남북정상회담에 연연하지 않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퍼 주기만 하는 정상회담은 갖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요?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李恩宰 議員 그러면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관한 입장은 누누이 설명하셨지만 간단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현안인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분명한 사과 또 재발 방지 이런 것이 되어야 남북대화가 기본적으로 갈 수가 있고요. 특히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남북관계가 동시에 개선되는 그런 바탕이 되는 남북정상회담이라야 바람직한 남북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議員 그다음에 최근 문제가 된 것은 북한 국방위가 구체적으로 남북 간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李恩宰 議員 그런데 공개한 이유 또는 공개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우리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또 남남갈등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恩宰 議員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남 간의 갈등 문제 이 사례는 제가 조금 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것에 관련해서 보충을 드린다면 저의 추측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 이 남북정상회담의 비밀접촉에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일부 접촉이 됐었는데 북한에서는 그와 같은 접촉 사실조차도 중국에 알리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래서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이와 같은 것을 그렇게 발표를 해서 중국이 알아듣도록 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은 하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일부 보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점까지를 유의해서 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恩宰 議員 결국 북한은 내년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해를 겨냥해서 우리를 상대로 한, 곳간을 채우기가 잘 안 되니까 남한 보수정권에서 얻을 것이 없다며 본격적으로 남한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왜곡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장관님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뭐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를 하여간 일언해서 곤경에 빠뜨리고 남남 갈등을 유도한다 이것은, 저는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恩宰 議員 잠깐 화면 좀 봐 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지금 유행하는 아이폰용 화면이라면서 SNS를 통해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기 위해서 북한이 공개한 비밀접촉 내용으로 인해서 이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제 보수, 진보 양 진영으로부터 비난받고 있다’는 점을, 이와 같은 SNS에 떠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들어 보셨지요, 장관님께서는?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李恩宰 議員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비밀접촉을 공개한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李恩宰 議員 그다음에, 따라서 장관께서는 남북한 간 접촉의 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북한의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셔서 아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꼭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비공개 접촉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애걸,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을 애걸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당했으니까 지금 저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애걸하고 또 저자

세로, 또 남쪽에는 이렇게 보이고 북쪽에는 저렇게 보이는 그런 정도의 합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북쪽이 오히려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설사 됐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 정도도 모르고 남북 접촉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李恩宰 議員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각급 대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결국은 북한에 핵을 포기하려는 그런 이유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차 정상회담처럼 국면 전환을 위해서 북한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대가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화 채널 구축은 물론 각급 회담, 정상회담이 필요하지만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정상회담을 추진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렇습니다.

○李恩宰 議員 앞으로도 정부는 정상회담에 대한 잘못된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원칙을 갖고 남북대화에 임해 주기 바라며,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는 나중에 서면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부장관 현인택 알겠습니다.

○李恩宰 議員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리비아 카다피 그다음에 이집트의 무바라크 이 두 분 범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그 국가의 국민들, 주민들을 심각한 인권의 사각지대로 빠뜨린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李恩宰 議員 그러면 북한의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지금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議員 그러면 북한의 김정일은 범법자 또는 범죄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또 통일부장관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은 제가 공개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李恩宰 議員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 또 공개 처형, 탈북자 문제,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계시는데 잠깐 영상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이 계속 나갈 건데요, 시간이 없어서…… 이 동영상은 남북 어린이들을 비교한 것인데 북한주민, 특히 영유아 아동들의 피폐한 생활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엠네스티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1000명당 63명꼴로 1000명당 6명인 우리에 비하면 영유아 사망률이 자그마치 10배가량 높은 실정으로 아프리카 수단과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과 관련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동향은 어떠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은 이미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통과를 시켜서 이에 매우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인권대사도 만들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2006년에 북한인권법 통과시켰고, EU도 아주 활발하게 북한인권에 관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議員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의 국제사회의 노력에 비해서 우리 정부의 노력,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어떠했습니까? 당시 정권이 북한인권의 참혹한 실상을 알면서도 왜 외면했습니까? 과거 정권이 참혹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 왜 침묵했습니까? 지난 정권 당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면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 기권, 북한인권에 대한 이상한 해석, 북한과의 대결 심화 등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李恩宰 議員 실제 민주당이 이런 입장을 갖고 북한인권법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통위를 통과한 지 무려 1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주민이 맞습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예, 그렇습니다.

○李恩宰 議員 그러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하여간 북한인권이 개선되도록 하는 노력을 되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恩宰 議員 그동안 북한인권법이 북한을 자극한다며 반대 당론을 유지해 온 민주당이 북한

인권과 북한주민의 민생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는 것인데 장관님이 보시기에 북한인권의 참상을 기록하는 것과 대북 지원 문제가 한 묶음으로 논의가 가능합니까?

○통일부장관 현인택 글쎄, 북한민생인권법이다 이렇게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다 하는 조항이 나와 본 적이, 그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인권법이 지금 법사위에 상정이 돼 있고 그 법안에 대해서는 외통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충분히 논의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잘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말하자면 북한 민생에 관련된 얘기 하시는 그런 인도적인 문제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런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좋은 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恩宰 議員 예, 북한인권의 참상을 기록하고 고발하는 것과 대북지원 문제는 전혀 다른 겁니다.

민주당이 여론에 밀려 일단 북한인권법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대북지원과 인권 문제는 성질이 전혀 다른 문제임에도 민주당이 이를 고집하는 것은 결국 북한인권법의 당초 입법 취지를 희석시켜서 북한인권법의 주요 핵심 내용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을 명문화시켜 천안함 사태 이후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꼼수라면 민주당은 북한주민의 생존 문제까지 국내의 정쟁에 활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더 이상 북한 동포의 참상을 외면하기보다 북한주민의 자유, 인권 개선을 위해서 나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예, 괜찮습니다.

○李恩宰 議員 우선 이명박 정부의 외교 성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성과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UAE 유전 개발에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110조 원 규모의 석유자원을 확보하였고, 특사 및 고위급 인사를 자원부국에 파견해서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해서 볼리비아에서는 리튬 개발에 유리한 기반을 확보하는 등 자원외교의 성과를 올린 바 있는데 이러한 성과를 두고 전시행정이니 또는 과잉홍보니 하는 야당의 비판은 그야말로 흠집 내기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자원외교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李恩宰 議員 예,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해외에 유출된 14만 560점 중 프랑스의 외규장각 도서 297권이 4~5월에 걸쳐서 145년 만에 반환이 됐고, 조선왕실의궤 등 일본 궁내청 소장 도서 1205권도 오는 11월 말까지 환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왕실의궤의 환수를 위해서 협정비준안이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을 통과하도록 이명박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과 함께 불교계가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등 온 국민이 염원한 것이 결국 성과를 거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맞습니다.

○李恩宰 議員 예, 그러시면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처럼 해외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기구 설립 방안을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恩宰 議員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좀 이와 같은 기구 설립을 추진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예, 그 점은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그 점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외교장관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은 외교장관한테 물으시면 더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李恩宰 議員 그다음, 어제 하루 종일 정치 관련 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제가 그것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산저축은행 이것은 광주일고 게이트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총리님 죄송합니다. 광주일고 나오셨는데 이런 말씀 이렇게 직접 드려서,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총리께서는 지난 4월 김대중 정부 시절 신용금고의 이름을 바꾸고 예금보호한도를 확대시킨 후에 노무현 정부 시절 88클럽을 도입한 것이 저축은행 부실의 단초였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신 바 있으시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예.

○李恩宰 議員 저축은행이 전체 자금의 80% 이상을 지역 서민의 예금으로 조달했음에도 서민대출은커녕 부동산 PF 대출에 쏟아 붓는 등 오랜 시간 문제점이 누적될 동안 금융당국의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기본적으로 금융 당국에서 관리 감독을 잘 못했고, 또 그런 상황을 이용을 해서 대주주나 경영진들이 불법을 행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착 관계 내지는 로비가 있었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恩宰 議員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청와대를 언급하며 마치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인 양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권력형 비리는 맞지만 이명박 정권에서는 퇴출저지 로비에 실패한 비리이고 지난 정권에서는 각종 특혜로 불법 부정한 수법으로 수천억 원의 돈을 빼돌릴 수 있었던 성공한 권력형 비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제가 아까 다른 의원 질문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저축은행 퇴출을 막기 위한 각종 로비가 진행이 됐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번 감사 내지 그 뒤에 일련의 조치에 의해서 퇴출이 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실패한 로비였다 하는 것은 맞고요.

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또 위중하게 보고 있는 것은 정말 SPC 형태로 그 많은 돈들이, 저축은행이 마치 인베스트 뱅크(invest bank), 투자은행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것이 퇴출이 이루어진, 그것은 그것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금융 당국에 책임이 있고 또 그 SPC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불법적인 유착이 있었느냐 하는 점이 굉장히 저로서는 궁금한 대목인데 그런 부분도 정확히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恩宰 議員 특히 부산저축은행 비리는 핵심 경영진이 모두 광주일고와 호남이라는 특정 학맥과 지연을 앞세워서 감독·검사 기관인 금감위, 금감원에 로비를 한 것 이외에 대출브로커, 로비스트 등을 동원해 정·관계 로비를 한 사실상 광주일고 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대주주, 경영진이 광주일고나 특정지역 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그룹 사태의 핵심 관련자들을 보면 설립자인 박상구 회장은 목포상고 출신으로 졸업 동기인 DJ와 목포상고 후배인 권노갑 전 의원과 허물없이 만날 수 있었던 사이로 알려져 있고 DJ가 집권한 98년 목포상고 서울동창회장에 선출되기도 했으며, 삼양타이어(현 금호타이어) 출신인 김양 부회장, 김민영 행장은 박 회장의 아들 박연호와 광주일고 선후배 사이였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도표를 통해서 보셨지요?

○국무총리 김황식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특정 학교 출신 동문들이 그 경영진 또는 대주주로서 많이 관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특별히 부각시켜서 '광주일고 게이트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하는 데 극히 도움이 되지 않는 지적이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문제가 그야말로 지역 문제라든지 그 밖의 다른 오해나 또는 갈등이 조성되지 않는 방향에서 문제들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李恩宰 議員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특히 부산저축은행 계열 경영진이 광주일고 등 특정 지역 출신 인사들로 메워지게 된 것은 박상구 회장이 일선에서 물러난 2004년 전후부터로 2003년 11월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 2대 주주로 참여했고 2006년 광주은행 부행장을 지낸 오지열씨 등 광주일고 출신이 부산저축은행과 계열 은행의 경영진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또 2대 주주인 박형선은 민청학련 사건 출신으로 이해찬 전 총리 등과의 친분은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

다. 이러니까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난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부산저축은행의 로비는 2010년 우리 감사원장님 계실 때 감사 이후에 퇴출 위기에 처하자 전방위 구명 로비 모양새로 변했지만 결국 퇴출됨으로써 구명 로비는 실패가 됐고, 야당이 근거도 없이 무분별하게 청와대를 언급하며 근거 없는 의혹만 부풀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총리님.

○국무총리 김황식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의 저축은행의 경영과 관련된 문제고 또 그것을 퇴출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시도, 노력이 실패한 로비가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것은 제가 명백히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저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그 문제를 적절히 지적을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퇴출 로비가 이어졌지만 그러나 실패했다, 이 정부에서, 이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어떤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가까운 사람들끼리 아무래도 모여서 하다 보면 그렇게 인맥이 형성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개인의 문제, 개인의 부도덕이나 불법행위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恩宰 議員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한쪽에서 너무 공격이 심하게 오니까 이쪽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주일고 출신 경영진들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부터 온갖 특혜를 받으며 자기 가족은 물론 사돈의 팔촌에까지 불법 대출을 해 줘가며 부산 시장바닥 서민들의 피땀 어린 돈을 갈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리를 키워 왔고 이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누가, 어떻게 비호했는지 그 검은 커넥션을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김황식 지금 퇴출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에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밝혀져서 응분의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과거 정부 시대에 SPC 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불법적인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밝혀질 수 있으면 그때 엄정히 처벌되면 당연한 거고요.

현재 아직 수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쪽이든지 간에, 퇴출 로비의, 저지에 관련된 것이건 또는 SPC 대출의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혜나 유착이 있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밝혀지면 그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 아직은 그야말로 추측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 문제는 누구, 어느 정권하고의 문제하고 관계없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조사되어 가지고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李恩宰 議員 그러나 본 의원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비리의 원천은 98년, 99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PF, 서민들의 돈을 받아 가지고 PF를 거의 50%, 40%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서민들의 돈을 서민들 대출하는 데는 안 쓰고.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총리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현 정부에서도 문제가 생긴 것은 하고 지난 정권에서도 한 건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지 그렇게 그냥 어물쩍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어물쩍하게 답변한 게 아니고요……

○李恩宰 議員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김황식 SPC 문제가 과거 정부에서……

○李恩宰 議員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저축은행의 파렴치한 대주주와 경영진이 7조 원이 넘는 불법 대출과 횡령을 저지른 사건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한 마당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어야 할 국회에 또다시 함량미달의 삼류 폭로정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폴리틱스(McPolitics) 한복판에서 저질 폭로를 진두지휘하며 정치권을 진흙탕 속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입니다.

그동안 과장되고 실체도 없는 엉터리 폭로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박지원 전 대표는 그 자신이 보해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문제와 관련된 연루 의혹부터 해명해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저축은행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전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가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답변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정말 민주당과 박지원 전 대표가 저축은행 사태의 진상을 명백히 가릴 생각이라면 박지원 전 대표는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 자숙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홍재형 이은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여러 의원님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 의원(257인)

강기정	강길부	강명순	강봉균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창일
고승덕	고흥길	곽정숙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권성동	권영길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금래	김기현	김낙성	김동성
김동철	김무성	김부겸	김상희
김선동	金先東	김성곤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영우	김영진
김옥이	김용구	김용태	김우남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재경
김재균	김재윤	김정권	김정훈
김진애	김진표	김창수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김태원	김태호
김태환	김학송	김학용	김학재
김형오	김혜성	김호연	김효석
김효재	김희철	나경원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노철래	류근찬
문학진	문희상	박근혜	박기춘
박대해	박민식	박병석	박보환
박상은	박상천	박선숙	박선영
박순자	박영선	박영아	박우순
박은수	박종근	박준선	박지원
박　진	박희태	배은희	백원우
백재현	변웅전	변재일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성윤환	손범규
손숙미	손학규	송민순	송영선
송훈석	신　건	신낙균	신상진
신성범	신영수	신지호	신학용
심대평	심재철	안경률	안규백
안상수	안홍준	안효대	양승조
여상규	오제세	우윤근	우제창
원유철	원혜영	원희목	유기준
유선호	유성엽	유원일	유일호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상현
윤석용	윤　영	이강래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상권
이상득	이석현	이성남	이성헌
이애주	이영애	이용경	이용섭
이용희	이윤석	이윤성	이은재
이인기	이인제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종걸	이종혁	이주영
이진복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식	이학재	이한성	이해봉
이혜훈	이화수	이회창	임동규
임해규	장광근	장병완	장세환
전여옥	전재희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동영	정두언	정몽준
정미경	정범구	정세균	정수성
정양석	정영희	정옥임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정희수	조경태	조문환
조배숙	조순형	조승수	조윤선
조전혁	조정식	조진래	조진형
주성영	주승용	진성호	진　영
차명진	최경희	최구식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연희 최영희
최인기 최재성 최종원 추미애
한기호 허 천 허태열 현기환
홍사덕 홍영표 홍일표 홍재형
홍정욱 홍준표 황영철 황우여
황진하

○개의 시 재석 의원(94인)

강기정 강명순 강석호 고승덕
곽정숙 김광림 김상희 김성곤
김성조 김성수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깅영우 김옥이 김우남
김장수 김정훈 김재윤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태환
김혜성 김희철 노영민 류근찬
박근혜 박대해 박병석 박보환
박우순 박희태 배은희 백재현
서상기 손학규 송민순 송훈석
안경률 안효대 양승조 원혜영
유재중 유정복 유정현 윤 영
오제세 이낙연 이명규 이미경
이애주 이영애 이용섭 이윤석
이재선 이정선 이정현 이진삼
이찬열 이철우 이춘식 이화수
이혜훈 이회창 이해봉 임동규
장병완 전재희 전혜숙 정갑윤
정두언 정세균 정장선 정진섭
정하균 정해걸 진 영 조경태
조윤선 주승용 최구식 최규식
최경희 최연희 최재성 최종원
한기호 현기환 홍영표 홍재형
홍정욱 황우여

○속개 시 재석 의원(73인)

강기정 강명순 강승규 고홍길
김광림 김금래 김낙성 김동성
김성동 김성수 김성순 김성조
김소남 김옥이 김용태 김장수
김재윤 김진애 김춘진 김충조
김태원 김학송 김학용 김호연
나성린 문학진 박병석 박보환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은수
박준선 서종표 손학규 송민순
신상진 신성범 심재철 양승조
여상규 원희목 원혜영 이경재
이낙연 이명규 이상권 이성남
이애주 이용섭 이윤석 이주영
이화수 이혜훈 임동규 장병완
전현희 전혜숙 정갑윤 정수성
정진섭 정태근 정해걸 조승수
조전혁 주승용 최병국 최연희
한기호 허 천 홍영표 홍재형
황영철

○산회 시 재석 의원(63인)

강명순 김광림 김금래 김성식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영선
김장수 김진표 김춘진 김충조
김충환 박민식 박보환 박선숙
박선영 박영아 박지원 배은희
백재현 서종표 송영선 신지호
안규백 양승조 우윤근 유선호
유일호 이경재 이낙연 이두아
이명규 이범래 이상권 이상득
이용희 이애주 이은재 이정선
이주영 이종걸 이진복 정갑윤
정동영 정미경 정영희 정의화
정장선 정진섭 정태근 정하균
정해걸 조윤선 조진형 차명진
최경희 최연희 한기호 허 천
홍재형 황영철 황우여

○출장 의원(1인)

조원진

○청가 의원(18인)

박주선 배영식 송광호 윤상일
윤진식 이병석 이사철 이상민
임영호 장윤석 장제원 전병헌
조영택 조해진 천정배 최경환
허원제 홍희덕

○국회사무처

사 무 총 장 권 오 을
입 법 차 장 김 성 곤
의 사 국 장 한 공 식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리 김 황 식
외교통상부장관 김 성 환
통 일 부 장 관 현 인 택
국 방 부 장 관 김 관 진

○출석 정부위원

국 방 부 차 관 이 용 걸

【보고사항】

○상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기획재정	손학규	민주당	2011. 6. 1
외교통상통일	김선동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11. 6. 1
지식경제	김태호	한나라당	2011. 6. 1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특별	정갑윤	한나라당	2011. 6. 1
	강창일 강기정 김영록 김상희 박기춘 박우순 박병석 신학용 오제세 조경태 장병완 장세환 주승용 조정식 최재성	민주당	
	김창수 이명수 임영호 노철래 곽정숙 정수성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간사 선임

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이명규	한나라당	2011. 6. 1
	노영민	민주당	

○상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명	사임위원회	보임위원회	교섭단체	연월일
이두아	법제사법	농림수산식품	한나라당	2011. 5. 31
김무성	법제사법	교육과학기술		2011. 6. 1
홍재형	정무	국토해양	민주당	2011. 6. 1
장병완	기획재정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2011. 6. 1
전병헌	기획재정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2011. 6. 1
정하균	기획재정	보건복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2011. 6. 1
김혜성	보건복지	기획재정		2011. 6. 1
정범구	행정안전	농림수산식품	민주당	2011. 6. 1
황우여	교육과학기술	법제사법	한나라당	2011. 6. 1
강성종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정무	민주당	2011. 6. 1
김성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기획재정		2011. 6. 1
진수희	농림수산식품	법제사법	한나라당	2011. 6. 1
이윤석	농림수산식품	행정안전	민주당	2011. 6. 1
신영수	환경노동	국토해양	한나라당	2011. 6. 1
차명진	환경노동	국토해양		2011. 6. 1
정진섭	국토해양	환경노동		2011. 6. 1
박순자	국토해양	환경노동		2011. 6. 1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국회운영	김무성	황우여	한나라당	2011. 6. 1

○특별위원 사임 및 보임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윤리특별	정갑윤	송광호	한나라당	2011. 6. 1
	박선숙	노영민	민주당	

○의안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김우남·이경재·유성엽·조영택·강기정·조경태·김영록·정해걸·최규성·김효석·김재윤 의원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이종걸·양승조·장병완·김성곤·유성엽·유선호·안규백·박주선·김재균·이석현·권영길 의원 발의)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6. 2 정부 제출)

이상 3건 6월 3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김우남·유성엽·조영택·강기정·조경태·김영록·정해걸·최규성·김효석·김재윤 의원 발의)

6월 3일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 김우남·유성엽·조영택·강기정·조경태·김영록·정해걸·최규성·김효석·김재윤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김우남·이경재·유성엽·조영택·강기정·조경태·김영록·정해걸·최규성·김재윤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김우남·유성엽·조영택·강기정·조경태·김영록·정해걸·최규성·김효석·김재윤 의원 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원희목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원희목·손숙미·김소남·김춘진·안홍준·정옥임·손범규·유재중·이춘식·서상기·김금래·공성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안민석·김영진·이종걸·양승조·권영길·조영택·김상희·김재윤·서종표·백재현·김춘진·유성엽·김유정·변재일 의원 발의)

6월 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준선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박준선·강성천·김동성·김무성·김옥이·김학송·나경원·노철래·손범규·유정현·이은재·이정현·이화수·정갑윤·조전혁·최연희 의원 발의)

6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조해진·신영수·이미경·강성천·이사철·김금래·홍영표·조원진·정진섭·김영우 의원 발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손범규·이낙연·유정현·유기준·조경태·박보환·김태원·윤석용·김옥이·김성수 의원 발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장병완·강기정·강창일·김상희·김재균·양승조·이춘석·유선호·유성엽·조영택·최종원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3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정수성·유기준·강길부·이한성·심대평·한기호·유재중·강창일·유성엽·이종혁·김기현 의원 발의)

6월 3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정갑윤·박준선·신성범·이사철·김태환·김소남·노철래·최구식·이화수·김세연 의원 발의)

6월 3일 지식경제위원회에 회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강승규·성윤환·김학용·여상규·신성범·김성수·조윤선·원희목·유정현·나성린·진영 의원 발의)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강승규·성윤환·김학용·여상규·신성범·김성수·조윤선·원희목·유정현·나성린·진영 의원 발의)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장병완·강기정·강창일·김상희·김재균·양승조·이종걸·이춘석·유선호·유성엽·조영택·최종원 의원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장병완·강기정·강창일·김상희·김재균·양승조·이춘석·유선호·유성엽·조영택·최종원 의원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

(2011. 6. 2 장병완·강기정·강창일·김상희·김재균·양승조·이종걸·이춘석·유선호·유성엽·조영택·최종원 의원 발의)

이상 5건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 장병완·강기정·강창일·김상희·김재균·양승조·이종걸·이춘석·유선호·유성엽·조영택·최종원 의원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남 의원 대표 발의)

(2011. 6. 2 김우남·강기정·조경태·김영록·최규성·김효석·김재윤·이춘석·강창일·강기갑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3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회부

○의안 철회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 발의)

(2011. 5. 27 조해진·원희룡·신영수·이미경·강성천·이사철·김금래·조원진·김학송·김영우·홍영표·정진섭 의원 발의)

6월 2일 발의자 철회 요구

○의견서 제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2011. 6. 2 국가인권위원장 제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